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인증제도 혁신에 따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 11 . 28

연구책임자 :	이 용 규	(중앙대학교)
연구 원 :	문 용 갑	(중앙대학교)
연구보조원 :	한 주 연	(중앙대학교)
	임 현 진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요 약 문

1. 과제명 : 인증제도 혁신에 따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2. 연구기간: 2008. 07. 01 ~ 2008. 11. 28
3. 연구책임자: 이 용 규
4. 계획 대 진도
 - 가. 월별 추진내용

세부내용	연구자	월별 추진일정					비 고
		7	8	9	10	11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법체계 분석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input type="checkbox"/> 법제도 개편 방안 제시 -민간화 -상호인정 -재분류							
<input type="checkbox"/> 비용·효과 분석 <input type="checkbox"/> 초고작성 <input type="checkbox"/> 완성본 작성							
분기별 수행진도(%)		50		50			

나. 세부 과제별 추진사항

- 1) 현행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분석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까지 파악하였음.
- 2) 방송통신기기 외국 인증체계 사례분석
-외국 사례는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3) 통합인증법(안)
-통합인증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출하였음.
- 4)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제정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통합인증관리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에 대하여 파악하였음.

5. 연구 결과

1) 현재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적 인증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인증제도가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낙후되어있다. 특히, 민간화 제도와 SDoC 제도 도입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떨어져 있다. 아울러, MRA도 일부 국가와는 2단계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인증관련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우리나라 인증 제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외국의 인증제도를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에 대한 인증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미국제도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새로이 제정되는 통합인증법제도에는 포함되는 중요 사항은 유선과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을 단일 법제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인증체계를 크게 인증(Certification), SDoC, DoC, Verification으로 구분하고 방송통신 기기군별로 이를 적용하는 점, 인증기관의 민간화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요소를 적절히 법 형식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4) 새로이 제정될 법(안)의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였다. 새로이 제정될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 중의 하나가 법제도 체제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법(안)이 소비자, 제조자, 인증-시험기관 그리고 행정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바로는 새로운 법(안)은 시험 및 인증 시장의 대외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효과, 제조자의 시험 및 인증 절차의 간소화, 소비자에게 신제품 제공의 신속화 등이 편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SDoC와 민간화에 따라 나타나는

비용은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취약성 제고 등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증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새로운 통합인증법률(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인증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새로운 조항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종보고서 초록

국문 초록
<p>우리나라의 현행 인증제도는 ‘민간화 이행수준의 미흡’,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자기적합성확인(SDoC)모듈의 부재’,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시장감시활동의 미흡’,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및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 문제는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의 민간화’, ‘전파연구소의 기능혁신’, ‘규제방식의 혁신’ 및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인증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인증관련 법률을 통합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화, MRA 2단계, SDoC제도를 포함시킨 새로운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법률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도 실시하였다.</p>
영문 초록
<p>The certification system, operating in Korea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inadequacy of privatiz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the absence of SDoC module’, ‘certification procedure for new technology and risk analysis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inefficient pre-regulation system’. These problems are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new policies to privatize the</p>

certification system, renovate the Radio Research Agency and regulation method and strengthen the market surveillance, should be adopted and implemented simultaneously.

Due to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e control of certification on IT products was transferred to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us, two different laws are regulating on certification of IT products. To conclude,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ntegrated law, for the privatiz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MRA and SDoC and to present the result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the adoption of new policies mentioned above.

색 인 어	한글	인증, SDoC, 민간화, MRA 2단계
	영문	Certification, SDoC, Privatization, MRA

SUMMARY

1. 현행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분석

표준화는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일·단순화 확대와 안전, 건강, 환경, 에너지 절약 및 신기술 보급 등을 위하여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2000년에 들어와서는 한국산업표준(KS)의 국제화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일본 공업표준(JIS)을 참조하였던 체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대응되는 국제표준(ISO, IEC 등)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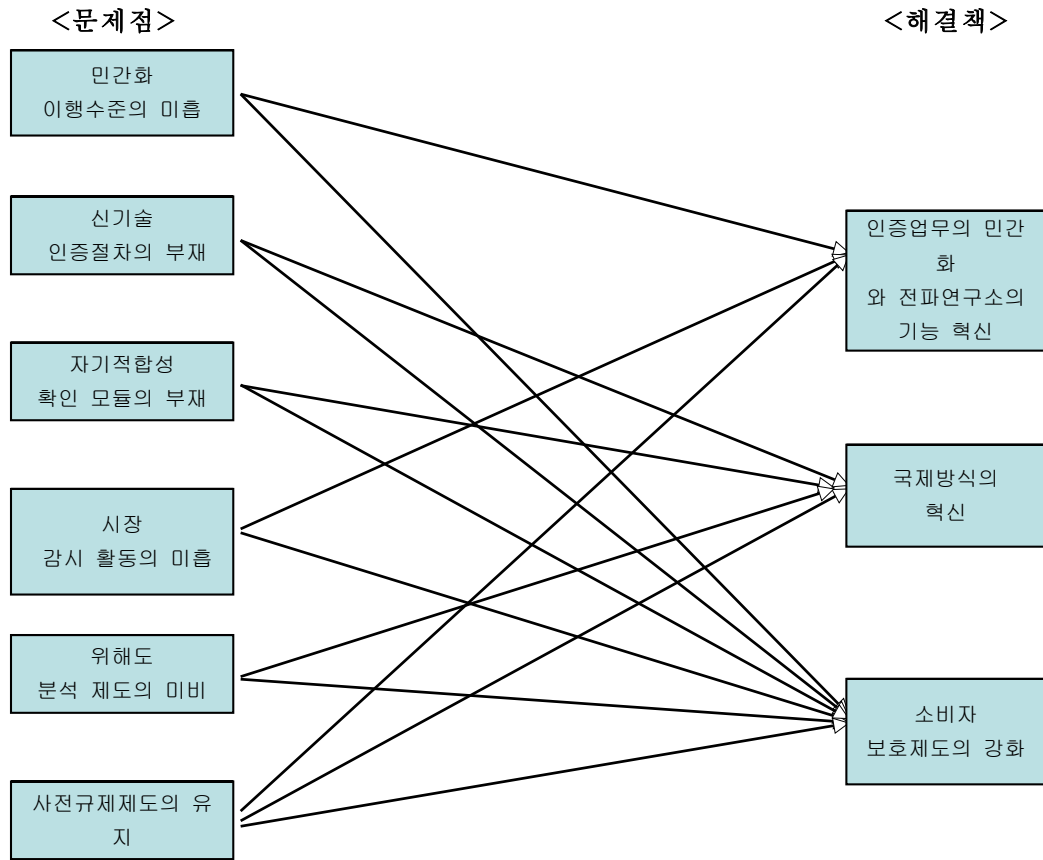
국제사회에서의 표준 확산에 대한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비정부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와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UN, WTO, ILO, WHO 등 국제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모든 국가는 국제표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국제표준화기관에서는 국제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의 이동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장벽 보다도 향후 표준장벽이 표준 후진국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법률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적합성평가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들이 법률의 규제와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성평가 활동, 예를 들면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험-검사 등 법률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떨어지거나 산업 활동에 역편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인증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면 정부 14개 부처는 57개의 법령에 근거하여 80여개의 법정인증제도(강제 및 임의포함), 60개의 민간인증제도 등 총 150여개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은 크게 강제성 여부를 기준으로 의무(규제)적 인증과 자율적 인증으로 나누어 진다.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인증제도는 다양하고, 자율적이며, 국제적으로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민간화 이행 수준의 미흡’,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의 부재’, ‘시장감시활동의 미흡’,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및 ‘사전규제제도의 유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들 문제점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민간화 이행 수준의 미흡’과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등은 우리나라의 규제제도가 사전적-행정적 규제의 틀을 유지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업무의 민간화와 전파연구소의 기능혁신’, ‘규제방식의 혁신’ 및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제도’를 도입하면 상기에서 언급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화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의 민간화와 전파연구소의 기능혁신’과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민간화 이행수준은 단순히 민간화만 추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 즉 신규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도입하여야 한다.

‘신기술인증절차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인증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혁신이 소비자 보호에 역행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민간기업도 이미 제품의 품질과 시스템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신제품이 출시되는 방송통신기기 시장의 상황에 맞도록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적합성확인(SDoC)모듈의 부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혁신’과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EU 등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은 근본적으로 사후-사법적 규제방식을 토대로 탄생한 제도이므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적-행정적 규제방식의 규제 틀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기책임하에 제품을 사전에 출시하는 것을 허용하면, 소비자 보호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명목상 존재하고 있는 제조자 책임법(PL)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감시활동의 미흡’의 문제는 인증업무의 민간화가 되면 인증업무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던 전파연구소의 기능을 시장감시활동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도록 재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문제도 종전의 모든 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혁신하자는 관점에서 출발

한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문제도 ‘인증업무의 민간화’, ‘규제방식의 혁신’은 물론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해결되는 사안이다.

2. 방송통신기기 외국 인증체계 사례분석

1) 미국 인증제도

미국 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자체증명(Verification), DoC와 SDoC 두 개의 적합성 선언제도 그리고 인증제도가 있으며, 정보통신기기 유형별로 각기 다른 적합성평가제도가 적용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미 국			
	자체증명 (Verification)	적합성 선언제도		인증 (Certification)
		적합선언(DoC)	제조자 적합선언(SDoC)	
	무선기기	무선기기, 정보기기	유선기기	유선기기, 무선기기, 정보기기
	대부분의 ISM장비, TV, FM리시버, 기타 디지털 장비, Pt-to pt , Microwave, 광대역 전송장치, 인마셋 장치, 406	컴퓨터 및 주변기기, TV 인터페이스 장비(VCR 등), 이용자용 ISM장비 등(전자렌지 등), 대부분의 수신장비	PSTN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제품	대부분의 전송장치, Scanning Device, Radar detector(DoC/SDoC 장치)
규 제	FCC			
지 정	NIST			
승 인				
인 정	인증기관 인정			NIST/ANSI

	시험기관 인정		NIST	NIST/A2LA	
	등록기관			ACTA	ACTA
	인증기관				FCC, TCB
	시험기관	제한없음	NIST 승인 시험기관	제조사 부설시험기관 또는 제3의 시험기관	TCB
	인증절차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자체보관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DoC 발행(신청자) ↓ 자체보관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SDoC 발행(신청자) ↓ ACTA 등록(신청자)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인증신청(FCC/TCB) ↓ 인증서 교부(FCC/TCB) ↓ ACTA 등록(FCC/TCB)
사후 관리	인증기관				FCC/NIST 공동 담당
	시험기관				
	인증기기	FCC/TCB 합동관리			
	미인증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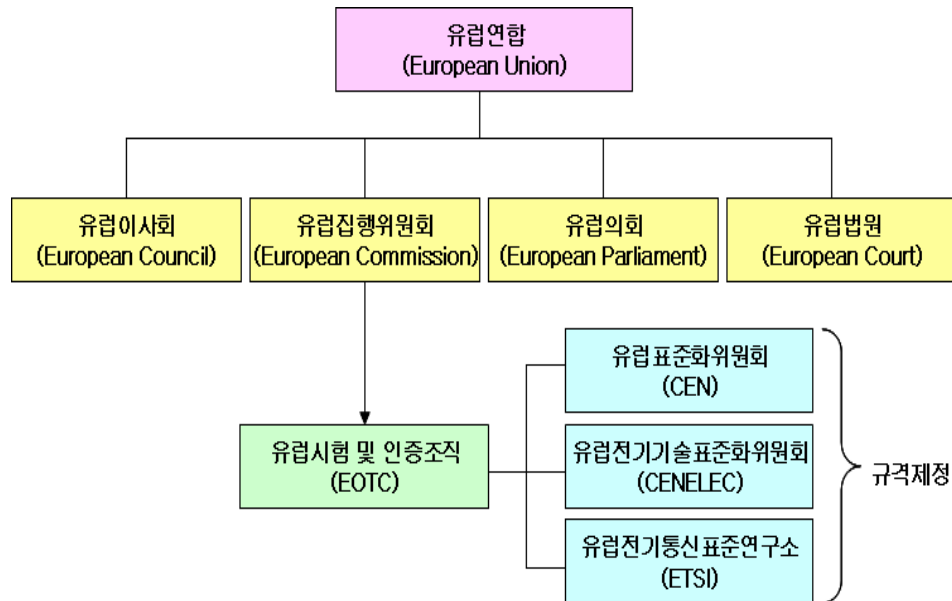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연방통신위원회
 - SDoC(Supply's Declar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 유선단말장치에 적용되는 자기적합 선언
 -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 민간인증기관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국립표준연구소
 - ACTA(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 : 단말장치접속행정위원회
- 자료원 : ETRI 기술혁신정책팀, 2006

<미국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체계>

2) 유럽의 인증제도

EU는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조직으로는 EOTC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이 있으며, 이 조직 내에 표준과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ETSI)의 3개 표준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자료원: ETRI(2006), “유럽의 CE 인증제도”

<유럽연합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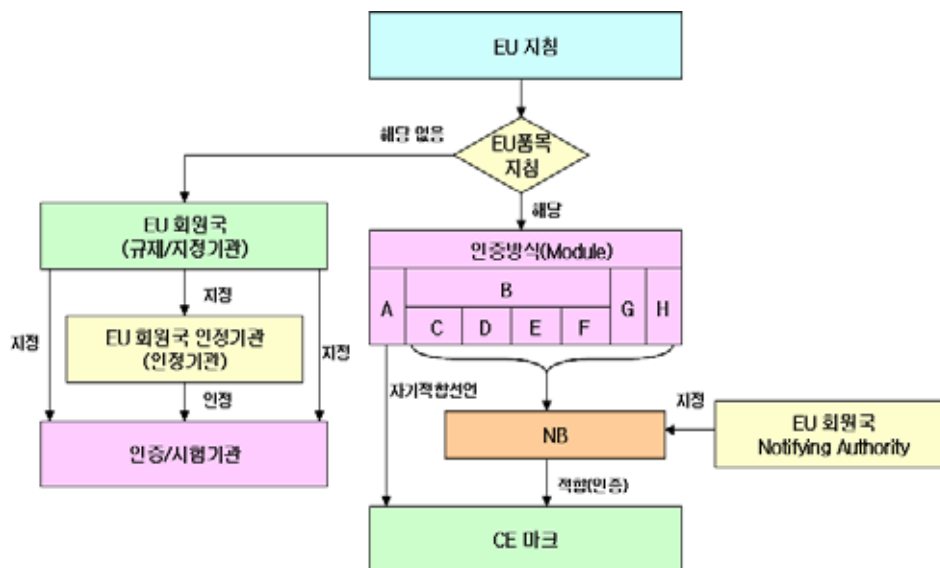
상기 기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표에 정리되어 있다.

기관명		역할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의 주요사항의 논의 및 발전방향을 제시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입법권, 예산심의 승인권, 대외협상개시 승인 및 협약 체결권, 주요정책결정권을 가짐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법률안을 제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의 정책관리 및 실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의 법률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무역협력과 관련한 국가간 협정의 교섭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법안을 통과시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의 기관(특히, 집행위원회)을 감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사회와 함께 예산을 결정함
유럽법원 (European Court)	Court of Justic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 법안 역할의 확정
	Court of Auditor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 활동의 재정 체크
유럽표준화위원회 (CE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기분야이외의 부문에서 표준화 활동 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규격을 계획, 편집, 선택하는 기능 수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격제정 : ISO/IEC 규격에 기초
유럽전기기술표준화 위원회 (CENELEC)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기기술분야 표준화 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격제정 : IEC 규격에 기초
유럽전기통신표준 연구소 (ETS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과 방송의 공통분야에서 유럽통신 표준 제정
■ 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 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및 역할>

EU의 인증체계는 크게 유럽 내에서 통용되는 CE 마크의 모듈
별 인증체계와 유럽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

별 인증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이 특정한 EU 지침에 해당되면 해당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된다. 만약, EU 지침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회원국의 규정에 의거해 인증을 받으면 된다. 아래 그림은 EU의 인증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원: 유럽 인증제도 개요 및 적합성평가 모듈(2007.3.23)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유럽연합의 인증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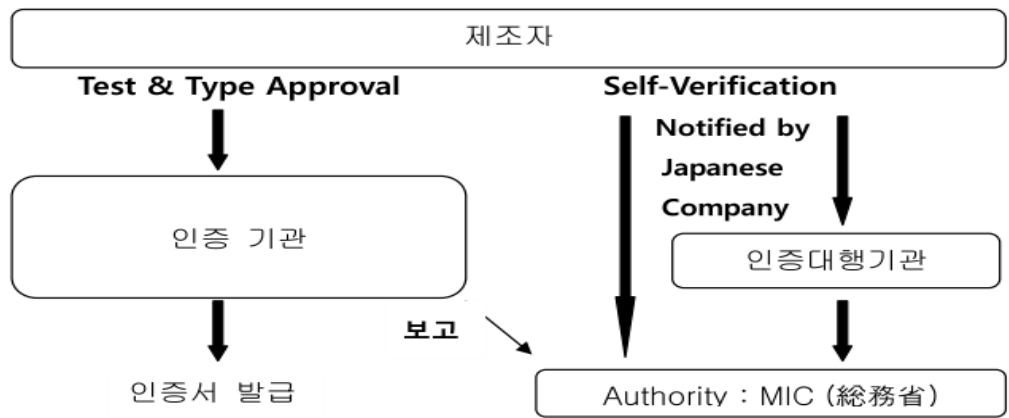
3) 일본의 인증 제도

인증 담당 정부부처는 J-MIC (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이며, 전기통신기기와 무선기기의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기, 팩시밀리, PABX ● ISDN, 터미널 Devices 	핸드폰 무선전화기 W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투스, 무선랜 ● 특정소출력 및 Security 기기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대상기기 관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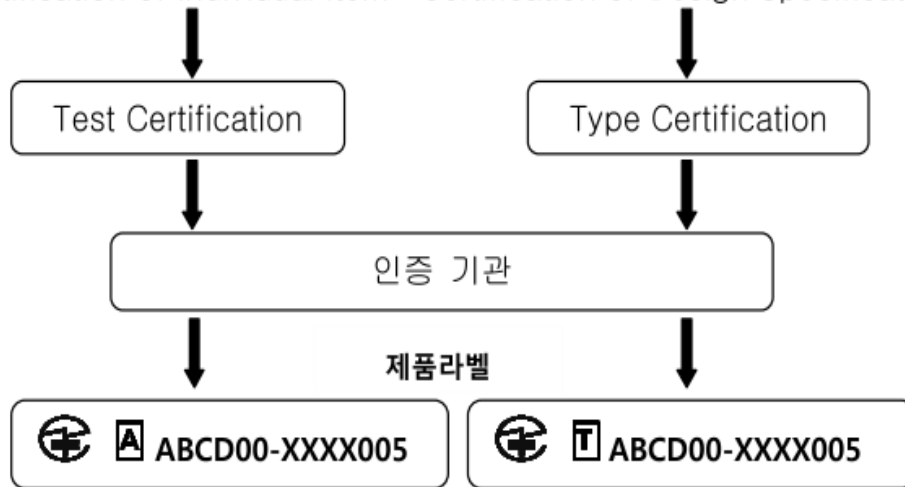
전기통신사업법 / 전파법에 따른 통신인증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인증 진행방법>

타입별 통신기기 인증(유선기기)은 다음과 같다.

Certification of Individual Item Certification of Design Specifications



<유선통신기기의 인증절차>

◦ 타입별 통신기기 인증(무선기기)

Approval of Individual Item Approval of Design Specifications



<무선통신기기의 인증절차>

유선통신기기분야에서의 Self-DoC 개념 도입(2004. 1. 16)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설명	인증기관
기술기준 (Technical Conditions)	설계인정(設計認證) – Type approval – Design Certification	등록인증기관 Self – DoC
	적합인정(適合認定) – Single unit – Compliance Certification	등록인증기관
기술적조건 (Technical Requirements)	설계인정(設計認證) – Type approval – Model Certification	등록인증기관
	적합인정(適合認定) – Single unit – Single unit Certification	등록인증기관

<기준에 따른 인증형태>

제품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기술기준 (Technical Conditions)	전화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PBX, Key Telephone, 기타)
	무선호출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설비
	ISDN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전용통신설비/디지털데이터전송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기술적조건 (Technical Requirements)	이동통신단말기기
	전용통신설비 단말기기
	기타의 통신 단말기기

<기준별 대상기기>

일본의 인증관련 기관별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관의 주요 기능	담당기관	관련 담당업무
규제기관 Regulatory Authority	총무성	- 인증규제의 개발
등록기관 Registering Authority 지정기관 Designating Authority	총무성	- 일본국 및 외국의 시험 및 인증업체가 일본국 내 시험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업무 수행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JAB (Japan Accreditation Board) (재단법인) 일본적합성인정협회	- 외국과의 MRA 시 활용하는 인정기구 - 적합성평가체계하의 거의 모든 분야의 인정을 실시 (경영시스템, 시험소, 직원, 제품)
시험기관 Testing Body	o 단말기기 및 무선설비: 일반시험기관 o 지정시험기관 제도 폐지('04.1) (시험능력이 있는 제조자는 누구나 시험성적서 발행가능) o 정보기기: VCCI 승인시험기관 o SDoC에 의한 자체시험	- 단말기기, 무선설비, 정보기기 등에 대한 시험업무 *인정 시험사업자(단말기기) 및 인정점검사업자(무선설비) 역할 폐지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o 등록인정(증명)기관 (개편전: 지정인증기관) (직접시험가능) - JATE, TELEC - DSPR, Chemitox - JARD(아마추어무선국 협회) - TUV(추후라인란드)동경지사	- TELEC 및 아마추어무선국 연맹은 특정무선설비에 대하여 인증하고 있음. - 기타 인증기관은 전기통신단말기기 및 특정무선설비 인증업무를 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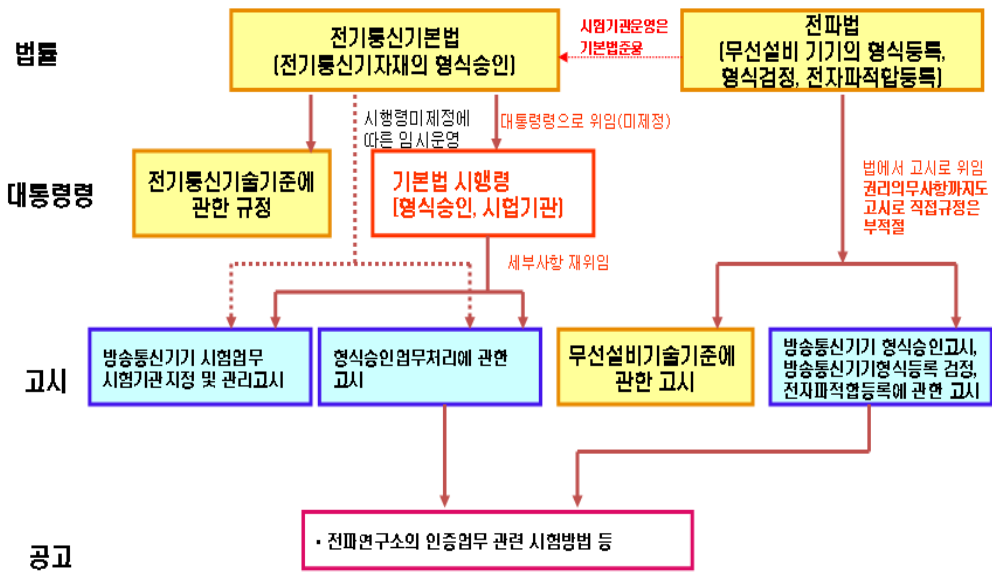
자료원: ETRI(2006), 일본의 인증제도

<일본의 인증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3. 통합인증 관리법률(안) 제정

통합인증 관리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통신기기의 인증과 관련된 입법 사항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하나의 법률체제화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독립제 행정부처가 아닌 까닭에 독자적인 부령 제정권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 결과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제 규율체계는 다소의 혼선을 겪고 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 운영체계의 문제와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불일치적 규제에 따른 문제에 따른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8년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의 이원적 운영을 보완하여 주던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과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령 제정권 상실로 폐지되면서, 부령 규정사항이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일부는 전파연구소 고시로 분리되고,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험인증제도 운영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개편 후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운영체제>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불일치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부령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상이한 규제체제를 보완하여 주던 입법적 보충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이 다음의 표와 같이 상이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소지들을 예전에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서 입법적 보충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물론 금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인증규칙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혹은 전파연구소 고시로 흡수하여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고시의 법적 성격상 민원인들에게 법적 기속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파법, 기본법 상의 상이한 규제 내용	현행 체계의 문제점
1. 인증의 면제 대상 모호 및 체계 일치 화 및 위임범위	- 면제, 부분면제, 복합기기에 대한 면제가 포괄적
2. 변경의 범위, 절차	- 기본법은 변경의 범위를 형식승인을 받은사항으로 전파법은 기술기준등과 관련 있는 사항을 규정 - 관련 고시는 기술기준+기술기준과 무관한 사항을 모두 변경범위와 신고대상으로 사항으로 규정하여 법률 위임범위 일탈
3. 해지 절차	- 기본법은 해지절차가 있으나 전파법은 없음
4. 사후관리 운영체계	- 기본법은 제36조에서 형식승인 사후관리 시행근거를 두고,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인증규칙에 위임 - 전파법은 제53조에서 포괄적 조사조치권을 둔 후, 형식등록 등의 사후관리 시행근거는 전파법 시행령에 둘
5. 사후관리 시행절차	- 기본법은 제36조 제4항에서 사후관리시 고지 및 증표제시 의무 규정 - 전파법은 제53조의 조사 조치시 증표제시 의무 시행령 규정
6. 행정처분기준	- 기본법은 별도규정 없음 - 전파법은 시행령에 일부사항이 분산규정
7. 권한의 위임·위탁	- 시험인증 업무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근거한 방통위 고시로 일괄 - 시행령에서 방통위 고시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같은

	시행령에서 전파연 고시로 재위임하는 것은 체계상 부적절
8. 각종 양식 및 수수료 부과 규정	- 법률에서 부령(인증규칙등)으로 위임한 수수료(인증 및 시험기관지정), 양식(인증서), 표시(인증마크), 행정처분기준과 인증규칙에서 정한 양식(각종 신청서, 인증서, 지정서, 변경신고서, 증표)과 기준(대상기기)의 통합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상이한 규제 내용>

이상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입법모델은 전파법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현재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제도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신규입법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동일한 제도를 각기 상이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판단될 때나 기존의 운영제도에 덧붙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결과 기존의 입법으로는 이를 수용하기에 곤란할 때 대내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신규 입법수요가 강하게 요구될 때 등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개편이나 규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면 전파법 중심의 통합모델은 과도기적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새로운 형태의 입법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기기 인증등 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기기 인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방송통신기기인증(형식승인, 등록, 검정)
- 전자파적합등록(제조자 자율확인제도(DoC))
- 시험기관 운영관리
- 민간인증기관 운영관리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 처리 고시

방송통신기기 지정 시험기관 운영 관리 고시

<통합인증관리법과 같은 신규입법모델>

통합인증관리법률 형태의 새로운 입법모델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담아야할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계획」 등과 같은 개선계획에서 담은 주요 개선사항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해당 개선계획에 따르면 주요 인증제도 개선 과제로 첫째, 인증유형의 재분류 체계 마련 둘째, 신제품 출시 촉진을 위한 가칭 ‘가인증제도’의 마련 셋째, 시험기관 사후관리 강화 넷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및 결함정보 보고제도 마련을 들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인증법률(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¹⁾

1) 법률안의 전체 내용은 이 보고서 제3장 제4절 통합인증관리법 제정(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방송통신기기의 관리 등

제1절 기본계획 등

제3조(방송통신기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제4조 (방송통신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제5조 (방송통신기기 안전자문위원회)

제2절 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 등

제6조(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기준)

제7조(적합인증)

제8조(적합확인)

제9조(적합인증·적합확인의 면제)

제10조(적합인증·적합확인의 표시)

제11조(적합인증·적합확인의 취소 등)

제12조(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절 방송통신기기의 보급촉진

제14조(잠정허용조치)

제15조(잠정허용조치의 취소 등)

제4절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의 국제협력

제16조(적합성평가결과 국가간 상호인정)

제17조(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제3장 방송통신기기의 시장 감시 등

- 제18조(개조·변조·복제 등의 금지)
- 제19조(방송통신기기의 조사·시험 등)
- 제20조(적합성평가기관의 검사 등)
- 제21조(부적합 보고 등) .
- 제22조 (방송통신기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4장 보 칙

- 제23조(수수료)
- 제24조(청문)
-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 칙

- 제26조(벌칙)
- 제27조(벌칙)
- 제28조(양벌규정) .
-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 제30조(과태료)
- 제31조(과태료)

부 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자적합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통합인증 관리법률(안) 주요 제정 목차>

4.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제정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의 민간화는 현재 정부기관인 전파연구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민간기관에게 업무를 이양하여 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산품에는 오래 전부터 법정강제 인증품목에 대해서도 민간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가 오래 전에 민간화되어 실시 중에 있다.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 상	비 용	효 과	비 고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완화로 인한 제품 부적합률 제고에 따른 피해증가 · 인증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신속구매로 인한 제품선택권의 확대 · 신제품 조기 사용으로 경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비용과 효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함 · 금전적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비용의 상승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에 대한 선택권 확대 · 인증기간 단축에 따른 업무 운영의 신축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사료되나 금전적 효과는 미약할 것임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감독의 강화 요구에 따른 비용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함에 따른 비용 절감 (현재 실비만 수수료로 징수하므로 행정비용 감소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와 사후관리 업무간 인원 이동으로 인하여 비용과 편익이 상쇄 전망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비용과 효과>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는 전통적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공인이나 제 3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사, 검사, 인증을 대체하는 규제 대안으로서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제품이나 그 공정, 그리고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절차(ISO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가 스스로 자기 제품이 해당기준(일반적으로 IEC, ISO등 국제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SDoC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 상	비 용	효 과	비 고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로 인한 제품 부적합률 제고에 따른 피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에 대한 선택권 조기 확보 · 신제품 조기 사용으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효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할 수준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무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비용 절감 · 시장접근 방법과 시간에 대한 통제 가능 · 제품설계변경 용이성의 증대 · 신속한 제품의 시장 출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가능한 수준의 효과 발생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강화 요구에 따른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효과 모두 측정가능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미약

<SDoC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MRA는 규제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하는 협정이다.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출국의 규제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떤 국가가 특정제품에 대하여 제3자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인증협정은 인정받은 수출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시험성적서, 인증 및 승인을 수입국은 인정하고

그 제품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수출되어서 상대국의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MRA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이며, 제2단계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과 인증서의 상호 인증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MRA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범위는 2단계 도입에 한정한다.

MRA 2단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 상	비 용	효 과	비 고
소비자	· 거의 전무	· 외국산 제품의 조기구매 가능과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	·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가 곤란할 수준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제조사	· 외국 제품에 대한 대응 기간의 단축에 따른 손실	· 인증비용 절감 효과 · 인증 기간 단축 효과 · 인증기관간 경쟁 심화에 따른 편익	· 중소기업에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MRA1단계 효과가 미약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측정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정 부	· 외국기업의 인증요청 건수 감소로 인한 세출 감소	· 국내 기업의 인증요청 건수 증대	· 비용-효과 모두 측정 가능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미약

<MRA 2단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효과 분석 시에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한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중복적 계산이다. 예를 들면, SDoC의 주요 편익 중의 하나는 제조자의 인증에 대한 접근 방법과 시간에 대한 통제 가능성 증대이다. 아울러 민간화 역시 이와 유사한 편익을 제조자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두 제

도가 동시에 동일 법률에 포함될 경우에 이러한 편익을 두 번 계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편익이 유사한 세 가지의 제도를 같은 법률에 포함시킬 때, 중복적 계산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여야 한다.

목 차

표 목 차	36
그림목차	38
제 1 장 현행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분석...	39
제 1 절 현행 인증제도 분석.....	39
제 2 절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8
1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	48
2 우리나라 인증제도 개선방안.....	54
제 2 장 방송통신기기 외국 인증체계 사례분석.....	61
제 1 절 미국 인증제도.....	61
1 FCC승인.....	61
2 TCB.....	67
3 사후관리.....	72
제 2 절 유럽 인증제도.....	79
1 개관.....	79
2 CE승인.....	82
3 NB.....	96
4. 사후관리.....	98
제 3 절 일본.....	104
1 J-MIC승인.....	104
2 VCCI.....	107
3 사후관리.....	109
제 3 장 통합인증관리법(안)제정.....	115
제 1 절 현행법령체계분석.....	115
1 개요.....	115

2	현행법령체계의 문제점.....	116
제 2 절	통합인증관리법 제정의 기본방향.....	122
1	개요.....	122
2	입법 모델별 특성.....	123
제 3 절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주요내용.....	129
1	개요.....	129
2	주요내용.....	130
제 4 절	통합인증관리법 제정(안).....	133
제 4 장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제정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151
제 1 절	개요.....	151
제 2 절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153
1	민간화의 개념 정립.....	153
2	방송통신기기분야에서의 인증업무의 민간화.....	154
3	인증업무 민간화의 필요성.....	154
4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의 민간화 실현 가능성...	160
5	민간화의 비용·효과 비교분석.....	162
6	민간화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분석.....	163
7	비용·효과의 비교 및 검토.....	164
제 3 절	방송통신기기 인증분야에 공급자 적합성 선언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166
1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의 개념정립.....	166
2	현행인증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급자 적합성선언제도 도입의 필요성.....	169
3	적합성선언제도 도입의 실현가능성.....	170
4	적합성선언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171
5	비용·효과 비교 및 검토.....	175

제 4 절	MRA 2단계 시행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176
1	MRA2단계의 개념과 필요성.....	176
2	사회적 규제요소와 기술수준에 비추어 본 규 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178
3	규제의 비용과 효과의 비교분석.....	178
4	비용·효과의 비교 및 검토.....	182
5	여타제도와의 비용과효과 중복계산 여부에 대 한 논의.....	184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5

표 목 차

표 1-1	강제성에 의한 인증제도 분류.....	41
표 1-2	방송통신기기 유형별 인증현황.....	43
표 1-3	국내정보통신기기인증 구분.....	44
표 1-4	인증 처리기간.....	46
표 1-5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등의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관련).....	47
표 1-6	미인증기기 및 표본조사 현황.....	52
표 1-7	각국의 FTA-MRA 체결 현황.....	54
표 1-8	2008글로벌 100대브랜드.....	56
표 2-1	관련규정 및 대상기기.....	67
표 2-2	미국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체계.....	78
표 2-3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및 역할.....	80
표 2-4	Directive별 모듈구분.....	88
표 2-5	R&TTE Directive지침서내용.....	89
표 2-6	EMS Basic Standard.....	93
표 2-7	제품군별 EMS규격.....	94
표 2-8	제품군별 EMI규격.....	95
표 2-9	NB의 국가별분포.....	96
표 2-10	Directive별 NB현황.....	97
표 2-11	대상기기 관련법.....	104
표 2-12	기준에 따른 인증형태.....	106
표 2-13	기준별대상기기.....	106
표 2-14	VCCI사후관리관련조항.....	110
표 2-15	일본의 인증제도 관련기관의 역할.....	113
표 3-1	전파법 및 정보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상이한 규제내용.....	121
표 3-2	공산품 및 전기용품 분야의 유사입법사례.....	129
표 4-1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한 인증처리기간...	156

표 4-2	대안별 장·단점 비교분석.....	160
표 4-3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비용과 효과.....	165
표 4-4	SDoC의 유형.....	168
표 4-5	단계별 인증방식 개선방안.....	170
표 4-6	SDoC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175
표 4-7	MRA2단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	183

그 립 목 차

그림 1-1	인증절차.....	45
그림 1-2	우리나라 인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그림 2-1	FCC의 규칙제정절차.....	62
그림 2-2	인증구분.....	63
그림 2-3	제품의 인증구분 예.....	64
그림 2-4	시험소의 인정범위.....	69
그림 2-5	TCB의 인증Scope.....	73
그림 2-6	적합성평가에 대한 각자의 역할.....	77
그림 2-7	유럽연합의 조직도.....	79
그림 2-8	유럽연합의 인증체계도	81
그림 2-9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flow chart.....	84
그림 2-10	모듈별적합성 평가절차.....	86
그림 2-11	CE마킹.....	90
그림 2-12	DoC Form샘플.....	91
그림 2-13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99
그림 2-14	사후관리의 법적flow.....	100
그림 2-15	사후관리3단계 평가방법.....	102
그림 2-16	Safeguard 절차도.....	103
그림 2-17	2007년 사후관리 분석도.....	103
그림 2-18	인증진행방법.....	104
그림 2-19	유선통신기기의 인증절차.....	105
그림 2-20	무선통신기기의 인증절차.....	105
그림 2-21	VCCI Market Surveillance절차.....	112
그림 3-1	조직개편 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운영체제..	117
그림 3-2	조직개편 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운영체제..	118
그림 3-3	전과법 중심의 통합제정모델.....	124
그림 3-4	통합인증관리법과 같은 신규입법모델.....	125
그림 3-5	인증유형의 재분류원칙.....	130
그림 4-1	신속하고 적절한 시장진입시간.....	173
그림 4-2	SDoC의 효과.....	174

제 1 장 현행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분석

제 1 절 현행 인증제도 분석

인증제도는 표준과 기술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제도는 유수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천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에 들어서야 산업표준화법을 제정하여 상공부에 표준국과 공업표준심의회를 구성하였고 국가표준(KS 표준)을 제정하여, 국가표준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에 따라 고품질의 소재와 부품 그리고 중화학 공업제품의 표준제정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공부에서는 1973년 공업진흥청을 발족시키고, 매년 500여종의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1970년대 말에는 6,700여개종의 국가표준을 보유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서 부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에 의한 수출증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및 기술개발 우위 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공업표준화 정책도 기초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여 선진 공업국 수준으로 국가표준을 상향시켰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일·단순화 확대와 안전, 건강, 환경, 에너지 절약 및 신기술 보급 등을 목적으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서는 국제표준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업진흥청 표준국에 국제표준과를 신설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오랜 동안 일본 공업표준(JIS)을 참조하였던 체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대응되는 국제표준(ISO, IEC 등)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향후에는 국제표준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정부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와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UN, WTO, ILO, WHO 등 국제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모든 국가는 국제표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장벽보다도 표준장벽이 표준 후진국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KSA한국표준협회, 2008).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법률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들이 법률의 규제와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성평가 활동, 예를 들면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험-검사 등 법률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떨어지거나 산업 활동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관련부처별로 운영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운용되는 적합성평가 활동은 주로 인증기관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Accreditation) 또는 허가(Recognition)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일정 수준을 보증하는 인증(Certification)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교정(Calibration), 검정(Verification), 시험(Test) 및 검사(Inspection)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정제도는 교정기관, 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운용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인증제도는 산

업계의 기술발전의 촉진이나 사회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법정인증제도와 인증관련 기관이나 업종별 단체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인증제도가 있다. 현재, 법정인증은 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에서 64개 법령에 의해 공산품안전인증 등 98 종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인증은 한국생활환경시험원의 Q마크 등 60여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구 분		내 용
법정 인증	강제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10개 부처 39개 인증) * 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 · 유통이 불가능
	임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 하는 인증(환경 마크 등 18개 부처 59개 인증) *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미취득 시 사실상 시장 진입이 곤란(준강제 인증)
민간인증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에서 자율시행 (Q마크 등 60여개 인증)

표 1-1 강제성에 의한 인증제도 분류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숫자가 60년대 중반에는 4개, 70년대 중반에는 13개, 80년대 중반에는 92개였는데,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이 도입된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운용 중인 총 인증 제도수 158개 중 51%인 81개가 90년대 이후 신규로 도입되었다. 요약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인증제도의 태동기인 60년대, 7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발전기를 맞이하였으며, 향후에는 성숙기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격한 증가로 난립양상을 보였던 인증제도는 통합과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인증시장 규모도 매년 9.5%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2007년 3.7조원에서 2012년에는 5.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산업의 세분화, 신제품 개발, 서비스산업의 확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형성에 따라 인증산업도 품질, 보건·환경, 안전, 에너지, 신기술, 서비스, 디자인 등으로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은 크게 강제성 여부를 기준으로 의무(규제)적 인증과 자율적 인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율적 인증은 제품과 서비스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표준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결과인 시험보고서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표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가 자율 인증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인증의 획득이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인증의 목적은 제조업체 및 제공업체의 입장에서는 인증을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구매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아울러 제조업자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3자 인증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

의무(규제)적 인증은 인증의 획득이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의무적이며, 이러한 인증제도는 인명 및 통신망 보호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방송통신부문의 의무(규제)적 인증은 크게 형식승인, 형식검정/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형식승인의 경우 기기에 따라 EMC(EMI, EMS)시험을 적용하고 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는 전파연구소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시

2) 방송통신분야 자율인증의 대표적인 제3자 인증기구는 TTA로서, 이 기관은 정보통신 표준 분야의 제품/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업무는 전파연구소가 지정한 민간시험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지정시험기관 지정은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지정규칙” 및 국제 규격 ISO/IEC 17025에 따라 전파연구소에서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다. 현재 지정을 받은 국내시험기관은 37개이며, MRA에 의한 외국의 시험기관은 67개에 달하고 있다.

인증업무는 2006년도 기준으로 264개 방송통신기기를 대상으로 총 10,070건을 수행하였다. 방송통신기기 시험시장은 177억원이며, 인증시장은 10억원 규모이다.

*08년도통계수치는9월29일기준임.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형식검정	20	35	17	18	28	27	145
형식등록	1,382	1,488	1,642	2,012	1,969	1,567	10,060
형식승인	603	517	322	586	376	236	2,640
전자파적 합등록	5,668	5,556	6,470	6,818	7,757	5,899	38,168
복합기기	451	478	439	636	949	818	3,771
	8,124	8,074	8,890	10,070	11,079	8,547	54,784

표 1-2 방송통신기기 유형별 인증 현황

< 표 1 - 3 >은 정보통신기기별 관련법규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기기 예	대상인증	인증목적	비고	시험항목
전기통신 기자재	전화기, 모 뎀, 팩시밀 리 등 (117종)	형식승인 (전기통신기 본법 제33조)	통신망 위해 방지	전기 통신 시 험과 전기 안 전시험 적용 (단, 기기에 따라 EMI 및 EMS시험 적 용)	-PSTN 등 망접속기준 -전기안전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무선설비 기기	선박용 경보 자동수신기 등 인명안전 과 관련이 많은 무선기 기 (17종)	형식검정 (전파법 제46 조)	인명구조	무선기기 형 식검정시험 (전파연구소 에서만 시험 가능)	-조난경보 및 긴급통신기능 -해상장비의 방수기능 -송신기 및 수신기의 RT 특성 등
	이동가입무 선전화 등 일반인이 쉽 게 쓸 수 있는 무선기 기 (22종)	형식등록 (전파법 제46 조)	혼신·간섭방 지	무선기기 형 식등록시험	-주파수 허용치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전력 -스푸리스 발 사강도 -부차적 전파 발사한도 등 -전자파흡수률
정보기기	PC, 프린터, 모니터 등 (80종)	전자파적합등 록 (전파법 제57 조)	기기 오작동 방지	EMI 및 EMS시험 적 용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전자파장해 보고기준

표 1-3 국내정보통신기기인증 구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연구소나 해당 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전자연구소에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는 전자과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을 하지 않고, 복합기기로 일괄 처리하므로 인증 신청시 형식승인 신청서류에 추가로 전자과적합등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림 1 - 1>은 인증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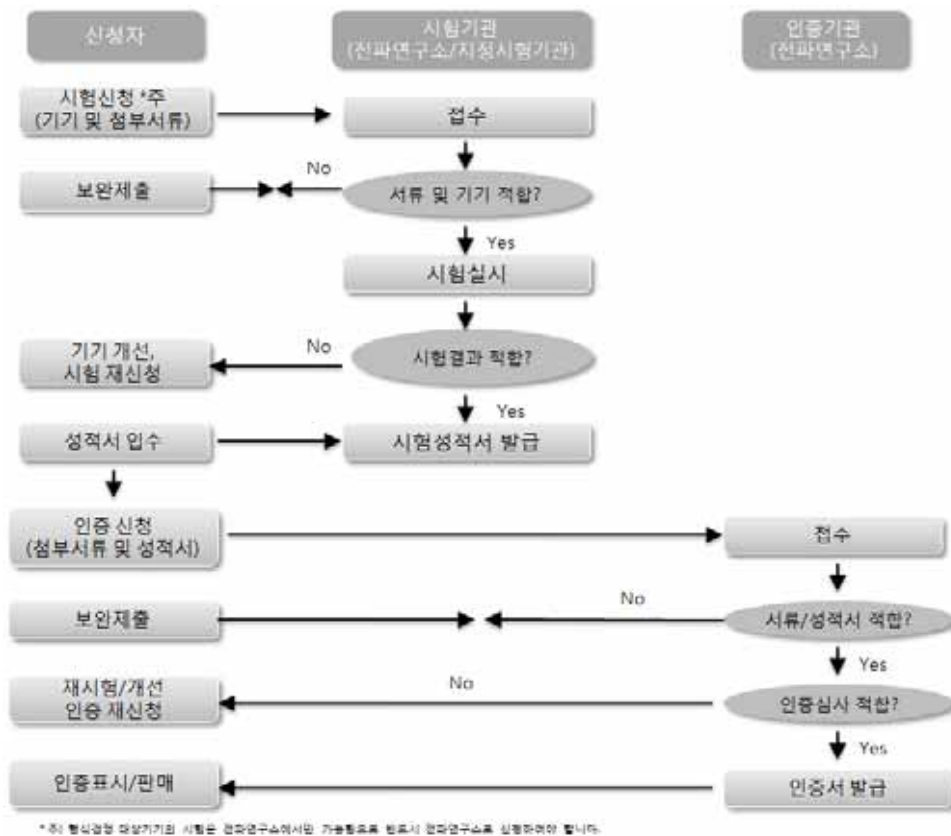


그림 1-1 인증 절차

시험을 신청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지정시험기관의 경우 시험기관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지정시험기관도 전파연구소가 정한 처리기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인증서는 최장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다. <표 1 - 4>는 제품별 인증처리기간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시험분야	소요시간 (최대)	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경우)
유선기기	전기통신시험	25일	25일
	전기안전시험	25일	25일
	전기통신 및 전기안전 동시 신청 시	25일	25일
무선기기	형식검정(경보자동수신기 및 레이다) 시험	55일	55일
	형식검정(기타 무선기기) 시험	25일	25일
정보기기	전자파 장애(EMI) 시험	25일	25일
	전자파 보호(EMS) 시험	25일	25일
	EMI 및 EMS 동시 신청 시	25일	25일

표 1-4 인증 처리기간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심사)에 의하면 인증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① 형식승인 :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 ②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 전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전자파인체보호기준
- ③ 전자파적합등록 : 전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 인증대상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 <표 1 - 5>에 정리되어 있다.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1.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인 증을 얻은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	인증취소	
2.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또는 생 산·수입 중지 및 수거명령	인 증 취 소 및 파기· 수거명령
3.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인 증 취 소 및 수거명 령
4.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 로 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인증취소

비 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표 1-5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관련)

인증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절차는 여타 행정처분과 대동소이하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에서

위반내용을 발견한 경우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명령, 생산·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한다. 행정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명령의 이행 결과 및 증빙자료 등을 주어진 기간 내에 전파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9조 및 전파법 86조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또한, 행정 처분으로 인증취소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 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는 인증의 취소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취소 받은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5월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제 2 절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인증제도는 다양하고, 자율적이며, 국제적으로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민간화 이행 수준의 미흡’,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의 부재’, ‘시장감시활동의 미흡’,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및 ‘사전규제제도의 유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문제점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민간화 이행 수준의 미흡’과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등은 우리나라의 규제제도가 사전적-행정적 규제의 틀을 유지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아래에서는 개별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가. 민간화 이행 수준의 미흡

선진국은 이미 상당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인증을 민간으로 이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기기 등 분야에서는 아직 국가가 주관하는 인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전파연구소가 기기 인증,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시장 감시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민간에 의해 인증이 주도되는 경우에 얻어질 수 있는 활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민간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³⁾

첫째, 인증의 신속성이 증가될 수 있다. 신속한 기술 변화 및 짧은 제품생산주기(Life Cycle)는 보다 신속한 제품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으로 제품의 성능이 개선되고 품질관리 능력은 향상된 반면, 인증 취득절차가 제품의 적기 출시에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기기는 생명주기가 3-6개월 정도이나 모델별 인증취득에 최소 20일,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방송통신기기의 생명주기에 비추어 볼 때,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문성이 증대될 수 있다. 민간부문은 신규 인력을 채용에 있어 매우 높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비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능력을 갖출 수 있다.

셋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증대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적합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인증기관의 숫자가 증대할 것이며, 시장원리가 작동되어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증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지역적으로 접근 편리한

3) Goerge Tannahill, "Introduction to FCC Rules and Equipment Authorization Program", FCC Office of Engineering Technology, Laboratory Division TCB Workshop October 2005.

지역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이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지역권에서 제품의 설계·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조자 혹은 유통업자가 본인이 신청한 인증의 취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연이 감소될 수 있다.

미국, EU 등의 선진국은 인증제도를 오래전부터 민간화하였다. 나아가 시험인증기관을 대형화, 다국적화하여 이들을 통해 자국 기업의 외국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SGS(스위스), TUV(독일), NEMKO(네델란드), UL(미국) 등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증제도를 민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후-사법적 규제제도가 일정 수준에 달하여야 민간화가 가능하다. EU 등 사후적-사법적 제도가 완비된 국가에서도 정보통신기기의 부적합률이 매우 높으며, 부적합 정보통신기기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실질적으로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현재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인증제도의 민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

나.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기능을 갖춘 제품에 대한 인증 방안이 없다. 정보통신분야는 기술발전 속도가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매우 빨라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기준 부재 제품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어 제조업체가

4)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의 부적합률은 2006년 15.4%, 2007년 18.3% 정도이다. 인증제도는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둔 제도이므로 규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부적합률이 낮아져야 한다.

새로운 상품을 적시에 출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정상적 절차에 의한 인증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인증 모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ADSL이나 VDSL이 출시되었을 때, 이 기술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제조자가 제출한 성능 및 구조 설명서를 토대로 인증서를 발부하여 주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그 이후 시점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부하여 주었다. 현재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IPTV, ATM T1급 이상의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증절차가 변칙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외국의 경우에도 기술기준 부재시 대체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EU의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부재한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SDoC로 처리된다. 미국의 경우, 기술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인증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의 제품에 대한 인증방식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단지, 규정 미비시 제조자 혹은 유통업자는 FCC를 상대로 청문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는 잠정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의 부재

방송통신기기 등 위해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자 혹은 유통업자가 스스로 제품에 요구되는 적합성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선언을 하는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이 없다. 따라서 위해성이 거의 없는 제품도 제3자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부재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시장 감시활동의 미흡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시장 감시활동’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 주도로 사전 규제위주의 엄격한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 감시활동이 미비한 점과 둘째, 현행 규정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이다.

정부주도로 사전 규제위주의 엄격한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 감시활동은 미흡한 수준이다. 중국, 대만 등 외국산 저가 수입제품이 범람하는 것에 비해, 표본조사 실시율이 낮아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가 미흡한 상황이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 9월
미인증 기기 (증가율)	170(1.8)	242(42.4)	327(35.1)	514(57.2)	424
표본조사 (실시율)	605(7.4)	638(7.9)	690(7.8)	724(7.2)	657

표 1-6 미인증 기기 및 표본조사 현황

현행 사후관리규정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0조 1항

소장은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기를 제출받거나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규정은 사후관리가 강제적이 아닌 선택적 사항으로 보이게 하며, 산업기술평가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방송통신기기에는 사후관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초기에 분석한 자료에 분석하면, 정보통신기기는 사후관리가 없는 모듈로 예시하여 놓았다.

마. 위해도분석제도의 미비

방송통신기기 사용의 증가로 소비자의 제품 안전과 전자파 인체영향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 인증기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즉, 위해 정도와 관계없이 기기, 품목별 인증절차가 동일한 수직적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기준은 유선 기기,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휴대전화, 전자파 적합성기준은 팩시밀리 등 일부 유선기기와 정보기기에만 적용하고 있다.

통신망에 접속되는 방송통신기기는 인체에 대한 위해 여부는 물론 통신망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여 인증의 엄격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량정보통신기기는 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등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은 신체 위해성만을 고려하는 여타 공산품 분야와는 다른 인증스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사전규제 제도의 유지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방송통신기기의 성능이 개선되고,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 구축 등으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

력이 향상되었으나 사전 규제위주의 엄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규제제도는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제조자의 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제품의 특성, 위해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증절차를 모든 제품에 적용함에 따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울러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면서 신제품의 개발 출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기준이 부재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므로 사전규제제도가 신제품 출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선진국은 자국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협력(MRA)이나 FTA를 활용하여 자국의 인증체계를 보급, 확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여 많은 국가와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구 분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FTA	체 결	13	19	8	4	5	4
	협상중	7	5	5	7	4	7
MRA 체결		7	7	2	5	3	3

표 1-7 각국의 FTA-MRA 체결 현황

2.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민간화 이행 수준의 미흡,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자기적합성확인절차모듈의 부재, 시장감시활동의 미흡,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인증업무의 민간화와 전과

연구소의 기능혁신', '규제방식의 혁신' 및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제도를 도입하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도입이 필요한 개별 정책에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가. 인증업무의 민간화와 전파연구소의 기능 혁신

현재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기관을 전파연구소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하고, 전파연구소는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시장감시업무에 치중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대다수 국가는 인증을 민간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증기관이 대형화, 다국적화되었으며, 해당 국가의 제조업자들은 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들을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민영화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파연구소의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전파연구소는 핵심 업무를 시험인증기관 지정·관리로 변경하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파연구소의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비영리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하고, 인증업무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규제방식의 혁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인증의 규제방식을 큰 틀에서부터 혁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전적-행정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후적-사법적 규제방식으로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자체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제품이 OEM방식이나 직접 제조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기업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일부 브랜드의 가치는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 맞추어 기업이 책임을 지고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

요하다. 즉, 자기적합성선언제도와 신기술 인증 절차모듈을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신속하게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편익과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과거와는 달리 매우 높다. 아울러, 중소기업도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각종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가 조사한 ‘2008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 현대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21위, 72위를 기록하였다. 2007년도에 100위내에 진입하였던 LG는 새로운 브랜드의 진입으로 7% 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위 초반에 위치하고 있다⁵⁾

(인터브랜드선정, 단위달러)

순위	기업	브랜드 가치
1	코카콜라	666.67억
5	노키아	359.42억
10	구글	255.90억
21	삼성	176.89억
24	애플	137.24억
25	소니	135.83억
36	캐논	108.76억
40	닌텐도	87.72억

표 1-8 2008 글로벌 100대 브랜드

자기적합성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기기의 위해 정도, 안정도, 불량률에 따라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위해 정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한 기기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시 적기에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공통기술기준

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02902011232740001).

만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신제품 잠정인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통신방식,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규격을 시험하여 문제가 없으면 먼저 잠정인증을 해주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 후 본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 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

인증기관을 민간화하고, 잠정인증제도와 SDo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소비자 보호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있으므로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증기준의 강화, 부적합 정보 보고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전자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인증기준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전기안전기준은 유선기기, 전자파흡수율기준은 휴대전화에만 적용하고 있다.

현재에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부적합률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 대만산 제품의 부적합률은 2006년도 기준으로 60.3%에 달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어 성능이 안정화된 제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저가 불법 및 불량 제품의 유통도 동시에 대폭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행정기관은 불법 및 불량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시험, 인증, 사후규제 기관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이 곤란하므로 기관 간 정보공유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시장감시 활동은 인증받은 제품 중 시험대상 기기를 표본 추출하여 시험하는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단속효과가 낮으므로, 표준 추출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부적합정보 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제품의 결함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부적합정보 보고제도 도입하여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부적합정보는 인터넷에 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적합정보보고제도의 절차는 제조, 수입, 유통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우선적으로 인지한 경우에 수거, 환급, 교환 등의 일련의 조치 후 전파연구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적합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적합 기업 및 제품 정보는 인터넷에 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적합 정보보고제도는 소비자기본법의 결함정보 보고제도를 참조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인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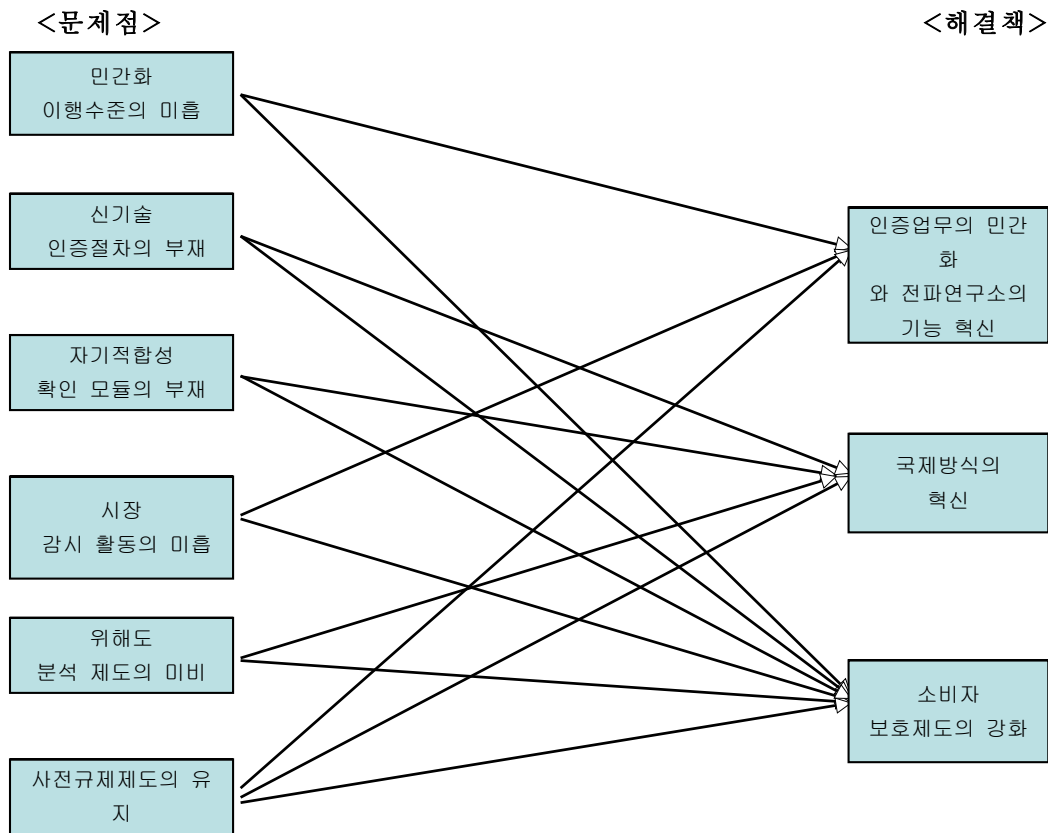


그림 1-2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화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의 민간화와 전파연구소의 기능혁신’과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민간화이행수준은 단순히 민간화만 추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

‘신기술인증절차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인증제도는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혁

신이 소비자 보호에 역행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민간기업도 이미 제품의 품질과 시스템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신제품이 출시되는 방송통신기기 시장의 상황에 맞도록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혁신’과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EU 등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은 근본적으로 사후-사법적 규제방식을 토대로 탄생한 제도이므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적-행정적 규제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기 책임하에 제품을 사전에 출시하는 것을 허용하면, 소비자 보호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명목상 존재하고 있는 제조자 책임법(PL)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감시활동의 미흡’의 문제는 인증업무의 민간화가 되면 인증업무에 사용하여 왔던 전파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시장감시활동에 재배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시장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과거보다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문제도 종전의 모든 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혁신하자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문제도 ‘인증업무의 민간화’, ‘규제방식의 혁신’은 물론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해결되는 사안이다.

제 2 장. 방송통신기기 외국 인증체계 사례분석

제 1 절. 미국 인증제도

1. FCC 승인

가.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의 지위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FCC는 미연방 정부와는 독립적이며 미연방 의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
- FCC는 1934년 통신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유무선 통신제품, 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의 자국 내 또는 국제적인 통신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 FCC의 법적 관할권은 미연방 소재 50개 주에 해당된다.
- FCC는 민간기업의 통신 산업 발전과 다음과 같은 2가지 공공 이익을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감독 한다.
 - 첫째, FCC는 송신기 및 기타제품들이 타 무선망에 간섭을 주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만든다.
 - 둘째, FCC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인증체제를 운영 관리한다.
- FCC 규칙 제정
 - 행정절차 시행령(APA-5 USC 553)
 - 어떤 규정에 대한 공공의 여론이 있을때 미연방 정부는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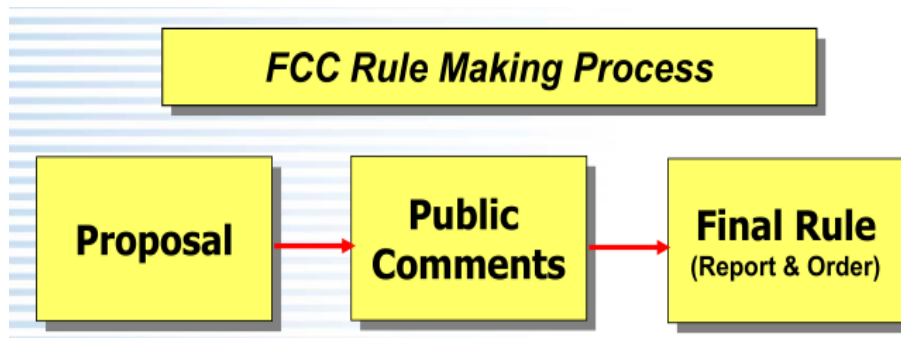


그림 2-1 FCC의 규칙제정절차

- 이러한 규정은 47CFR Part1, Subpart C에 기술되어 있다.

나. OET (Office of Engineering & Technology)

- FCC OET의 역할은 시장에 유통되는 무선제품이 타 무선망 또는 무선기기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파를 관리하는 것이다.
- OET는 무선제품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품인증시스템(EAS : Equipment Authorization System)을 운영한다.

다. 인증 구분

- FCC는 현재, 4가지의 제품인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 Verification
 - 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 Cer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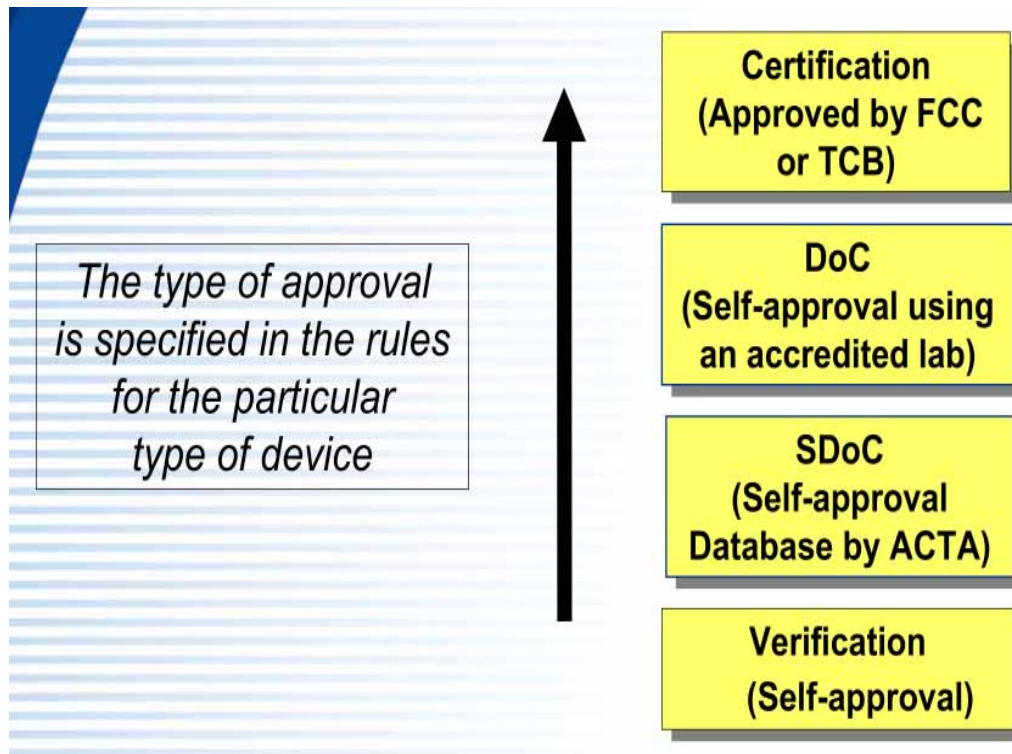


그림 2-2 인증 구분

- 제품의 인증 요구사항은 제품의 동작 상태에 따라 관련 Part별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 FCC는 더 이상 제품의 승인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품은 TCB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일부 제품들은 제조자가 DoC 또는 Certification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Verification	SDoC	DoC	Certification ²
Most ISM Equipment		PC's & Peripherals	PC's & Peripherals ¹
TV & FM Receivers		Most Receivers	Most Receivers
All Other Digital Devices		TV Interface Devices	TV Interface Devices
Pt-to-Pt Microwave		Consumer ISM Equipment	Consumer ISM Equipment
Broadcast Transmitters	Telephone Equipment		Telephone Equipment ¹
Aux. Broadcast Transmitters			Most transmitters
INMARSAT Equipment			Scanning Receivers
406 MHz ELT			Access BPL
CATV Relay Transmitters			

그림 2-3 제품의 인증구분 예

○ Verification (입증)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 확인 없이 미국에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예) TV & FM 수신장치, Digital Device, Class B, 외장형 SMPS, 대부분의 ISM장치, Pt-to-Pt Microwave, 방송용 송신장치 및 부가장치

○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적합성선언)

1996년부터 채택한 것으로서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하여,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Accreditation Laboratory)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한다.

미국과 MRA가 체결되지 않는 나라에서의 NVLAP or A2LA에 승인된 시험소는 DoC인증을 할 수 없다.

예) PC 또는 주변기기장치, Part15 대부분의 수신장치, TV 인터페이스 장치, 케이블시스템 터미널장치, 소비자용 ISM 장치

○ Certification (인증)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 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Filing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 서류등을 승인기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에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FCC는 2000년 6월 이후로 민간인증제도인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업무를 이양하므로서 인증기관의 민간화 및 복수화를 도모한다.

예) 대부분의 송신장치, Scanning Receivers, Telephone Equipment, PC 또는 주변기기장치, Part15 대부분의 수신장치, TV 인터페이스 장치, 소비

자용 ISM 장치

○ 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전기통신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 제조자가 기기를 테스트하고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제조자 적합선언(SDoC)을 하는 제도로 반드시 ACTA, 즉, Administrative Council of Terminal Attachment에 Filing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며 주로 PSTN망에 연결되는 제품이 해당되며 신청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및 시험보고서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라. 관련규정 및 대상기기

◦ FCC인증에 대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47 (Telecommunication)에 규정돼 있으며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규정	대상 기기
Part 11	Emergency Alert Systems
Part 15	Low Power Unlicensed Devices
Part 18	ISM (Industrial, Scientific & Medical) Equipments
Part 20	Commercial Mobile Radio
Part 22	Public Mobile
Part 24	PCS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Part 25	Satellite Communications
Part 27	Miscellaneous Communications
Part 68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Part 73	Broadcast Services
Part 74	Auxilliary Broadcasr Services
Part 78	Cable Television Relay
Part 80	Maritime Service
Part 87	Aviation Service

Part 90	Private Land Mobile Service
Part 95	Personal Radio Service
Part 97	Amateur Radio Service
Part 101	Fixed Microwave Service

표 2-1 관련규정 및 대상기기

2. TCB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가. TCB는 공인된 인정기구에서 ISO/IEC Guide65에 의거하여 인정한 인증기관이다. TCB는 FCC로부터 제품인증에 대해 인증권한을 지정받으며 독립적인 제3자의 인증기관이다. 또한 TCB는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제조자는 TCB가 될수 없다. 미국과 국가간 MRA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외국시험소도 TCB가 될수 있다.

나. TCB 인정 요구조건

- ISO/IEC Guide 65 (인증기관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조건)
- ISO/IEC Standard 17025 (시험소 지정을 위한 요구조건)

다. TCB의 위치

- TCB의 위치는 미국 내 또는 MRA 상대국의 영토내에 지정받은 영역에 의치하여야 한다.
- TCB 시험소와 시설은 같은 국가 영토 내에 있어야 한다.

라. TCB의 시험능력

- TCB는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에 대해 설비, 시험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 TCB의 시험능력에 대한 평가는 ISO/IEC Standard 17025 기준을 따른다.

마. TCB의 의무 (§2.962 (e) and Public Notice, DA99-1640)

- TCB는 FCC규정에 의거하여 제품인증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 TCB는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TCB는 ISO Guide65의 Sub-Contract절에 의거, 어떤 시험 데이터도 인정해야하며 불필요한 재시험은 하지 않는다.
- TCB는 인증신청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 TCB는 30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 TCB 시험소에 대한 인정범위

ISO/IEC 17025 Accredited Laboratory Scope of Accreditation

Scope A –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7 CFR Parts 11 (<i>Emergency Alert System (EAS)</i>), 15 (<i>Radio Frequency Devices</i>) and 18 (<i>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i>) 2. FCC MP-5, (February 1986) <i>FCC Methods of Measurements of Radio Noise Emissions Fro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i> 3. ANSI C63.4-2003, <i>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Noise Emissions from Low-Voltag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the Range of 9 kHz to 40 GHz</i>
A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7 CFR Part 15, <i>Radio Frequency Devices</i> 2. ANSI C63.4-2003, <i>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Noise Emissions from Low-Voltag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the Range of 9 kHz to 40 GHz</i>
A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7 CFR Part 15, <i>Radio Frequency Devices</i> 2. ANSI C63.17-1998, <i>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Methods of Measurement of the Electromagnetic and Operational Compatibility of Unlicensed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UPCS) Devices</i> 3. ANSI C63.4-2003, <i>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Noise Emissions from Low-Voltag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the Range of 9 kHz to 40 GHz</i>
A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7 CFR Part 15, <i>Radio Frequency Devices</i> 2. ANSI C63.4-2003, <i>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Noise Emissions from Low-Voltag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the Range of 9 kHz to 40 GHz</i>
Scope B –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7 CFR Parts 2 (<i>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y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i>), 22 (<i>Public Mobile Services</i>), 24 (<i>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i>), 25 (<i>Satellite Communications</i>), and 27 (<i>Miscellaneous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s</i>) 2. ANSI/TIA-603-C (2004), <i>Land Mobile FM or PM Communications Equipment Measurement and Performance Standards</i>
B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7 CFR Parts 2 (<i>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y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i>), 22 (<i>Public Mobile Services</i>), 74 (<i>Experimental Radio Auxiliary, Special Broadcast</i>)

그림 2-4 시험소의 인정범위

- TCB의 시험소 관련부분은 상기 표에 나와 있는 규정과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범위가 구분되며 이는 ISO/IEC 17025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사. TCB의 제한 (§2.962 (e)(5))

- TCB는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 TCB는 FCC에 준하는 법적 행동을 할 수 없다.
- TCB는 규정이 없는 특이한 제품에 대해 인증진행을 할 수 없다.

- TCB는 30일이 경과된 후 인증을 취소시킬 수 없다.
- TCB의 모든 행동들은 FCC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아. TCB의 인력관리

- ISO/IEC Guide65에 의거, TCB의 승인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직원들의 품질, 교육, 경력에 대한 정보를 TCB는 유지관리 해야 하며, 교육의 기록과 경력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이름 및 주소, 입사일 및 직책
 - 품질교육과 전문성
 - 승인기관의 각 영역에 대한 경험과 교육
 - 최근 업데이트한 기록일자
 - 수행평가

자. TCB의 정보 유지관리

- FCC가 최신 정보들을 FCC 데이터베이스 에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 TCB는 종업원, 주소, 이름, 인증 유효기간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 미국 내에 있는 TCB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통보해야 하며, MR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는 해당국가의 인정기구에 통보해야 하며 동시에 인정기구는 FCC 데이터 베이스에 최신화하여야 한다.

차. TCB의 직원교육

- ISO/IEC Guide65 5.2절에 의거, TCB는 승인과정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의 품질, 교육, 경력에 대한 정보를 유지관리 해야 한다.
- FCC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교육을 제공한다.
 - Basic EMC Requirments
 - General RF Exposure Requirments
 - Part22H/24E Handset RF Exposure Requirments
- TCB는 직원들이 원만한 제품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TCB들은 FCC 및 TCB 워크샵과 같은 추가적인 교육에 참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카. TCB의 시험데이터 인정

- FCC Part15, Part18에 해당 되는 제품은 공인인증시험소 또는 FCC에 등록된 시험설비로 시험하여야 한다.
- TCB에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EAS(Equipment Authorization System)에서는 등록된 시험설비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Section 2.962절에 나와 있듯이 TCB는 ISO/IEC Guide65에 의거, 모든 시험데이터를 인정해야 되며 불필요한 재시험은 할 수 없다.
- TCB는 승인진행시, 다음과 같은 시험데이터가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 시험절차의 정확한 규정

- 시험의 유효성
- 시험구성의 정확한 규정
- 시험설비의 간략한 설명(시험 Setup사진 및 블록도)
- 모든 시험장비의 교정일자

3. 사후관리 (Post-Market Surveillance)

가. TCB의 사후관리

- TCB는 ISO/IEC Guide65에 의거, 사후관리 시행의 책임을 갖는다.
- 관련 규정 : Clause 13 of Guide 65, 47 CFR 2.962(g)(2)

Report and Order in FCC ET Docket 98-68, Public Notice
DA99-1640(1999년 8월17일)

- 사후관리의 일반적인 절차

○ Sample Selection

TCB의 사후관리 시험할 샘플 시료는 해당 TCB에서 인증을 내준 제품 중에서 선택된다.

TCB는 사후관리 시험할 샘플시료를 선택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1) 신기술, 신규 인증권자, 신규 시험소
- (2) 부적합 경험에 있는 제품
- (3) 제품 인증시 시험성적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속적인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는 제품
- (4) 특이한 형태의 제품에 대한 FCC의 사후관리 요구가 있을 때
- (5) 무선망, PSTN망 또는 소비자가 타 기기로부터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때

○ Sample Rate

TCB에 의해 샘플링되는 샘플시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Scope A-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Scope B-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TCB에서 사후관리 시험할 제품의 총 수량은 해당연도에 인증을 내준 제품중 총 수량의 최소 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의 형태는 하나의 FCC ID를 갖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TCB Scope of Accreditation	
Scope A –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Low power transmitters operating on frequencies below 1 GHz (with the exception of spread spectrum devices), emergency alert systems, unintentional radiators (e.g., personal computers and associated peripherals and TV Interface Devices) and consumer ISM devices subject to certification (e.g., microwave ovens, RF lighting and other consumer ISM devices)
A2	Low power transmitters operating on frequencies above 1 GHz, with the exception of spread spectrum devices
A3	Unlicensed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PCS) Devices
A4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UNII) devices and low power transmitters using spread spectrum techniques
Scope B –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Personal Mobile Radio Services in 47 CFR Parts 22 (cellular), 24, 25, and 27
B2	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in the following 47 CFR Parts 22 (non-cellular), 73, 74, 90, 95 and 97
B3	Maritime and Aviation Radio Services in 47 CFR Parts 80 and 87
B4	Microwave Radio Services in 47 CFR Parts 27, 74 and 101
Scope C –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C1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in 47 CFR Part 68

그림 2-5 TCB의 인증 Scope

사후관리 시험은 TCB에서 인증내준 제품의 수량을 근거로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심사할 제품의 수량은 해당연도 TCB승인 받은 총 제품에서 FCC 인정시험소 및 미인정시험소 성적서를 같은 비율로 반영해야 한다.

(2) Scope C-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TCB에서 사후관리 시험할 제품의 총 수량은 TCB에서 해당 연도에 인증을 내준 제품중 총 수량의 최소 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3) TCB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TCB에서 해당연도에 인증을 내준 제품 중 SAR시험과 관련된 제품은 최소 1%이상은 사후심사해야 한다.

○ Obtain Sample

TCB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샘플을 확보한다.

(1) 인증권자에게 인증 받은 제품의 샘플을 요청한다.

인증권자가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FCC가 직접 통지해야 한다.

(2) 시장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샘플을 구입한다.

○ Evaluation

시험샘플은 FCC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TCB에서 적합성평가를 진행한다.

(1) 시험샘플은 FCC 사후관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시험한다.

FCC위원회의 모든 요구사항을 시험하지는 않지만, 부적합이 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해서 FCC규정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시험을 요구한다.

(2) 시험은 TCB 또는 TCB의 외부위탁기관에서 시행하며, 외부위탁기관은 ISO/IEC Guide65 4.4절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TCB는 외부위탁기관이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적합한 시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 (3) 시험 데이터와 샘플은 승인자료의 정보와 비교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샘플의 내부사진에 변경이 발생되었는지 검사해야 하며, 모든 무선 파라미터(출력, 주파수, 동작모드등)가 일치되어야 한다.
 특정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FCC에 통보해야 한다.
- (4) TCB는 라벨이나 사용자설명서가 적합하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샘플시험도 진행한다.
- (5) 사후심사용 성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야 함.
 사용되어진 시험장비 및 Test사이트, 시험장비의 교정유효기간
 준수, 시험방법, 시험을 진행한 시험자의 사인
- (6) 승인기관의 검토와 결정은 시험샘플이 FCC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진다.

○ Follow-up Actions

- (1) 사후심사동안 시험시료가 FCC규정에 부합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TCB는 즉시 인증권자와 FCC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시정대책서가 TCB를 통해 FCC에 제출되어야 한다.
- (2) TCB는 사후관리 진행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연간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되는 데이터는 TCB Scope (A,B, and C)에 따라 사후심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 (3) 사후심사용으로 제출한 시험시료가 인증 진행시의 시료와 같지 않다면, TCB는 즉각 인증권자와 FCC에 통보해야 한다.
- (4) TCB는 TCB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사후관리에 대한 활동보고

서를 30일 이내에 FCC에 제출한다.

나. FCC의 TCB 사후관리

- TCB의 품질 및 적합성평가는 FCC에서 TCB의 인증 비율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 FCC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TCB 인증이나 30일이 경과된 인증에 대해서 직접 관할한다.
- TCB의 결함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TCB지정 및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다. FCC의 사후관리

- FCC Lab은 자체 재원이 허용되는 한, 시장에 있는 제품의 모니터링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 사후관리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작된다.
 - 간접 영향을 받는다는 불만이 접수 되었을 경우
 - 시장 조사를 통한 경우
 - 다양한 제품에 대한 조사를 통한 경우
 - 경쟁회사의 불만이 접수 되었을 경우
- FCC Lab은 재원이 허용되는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정된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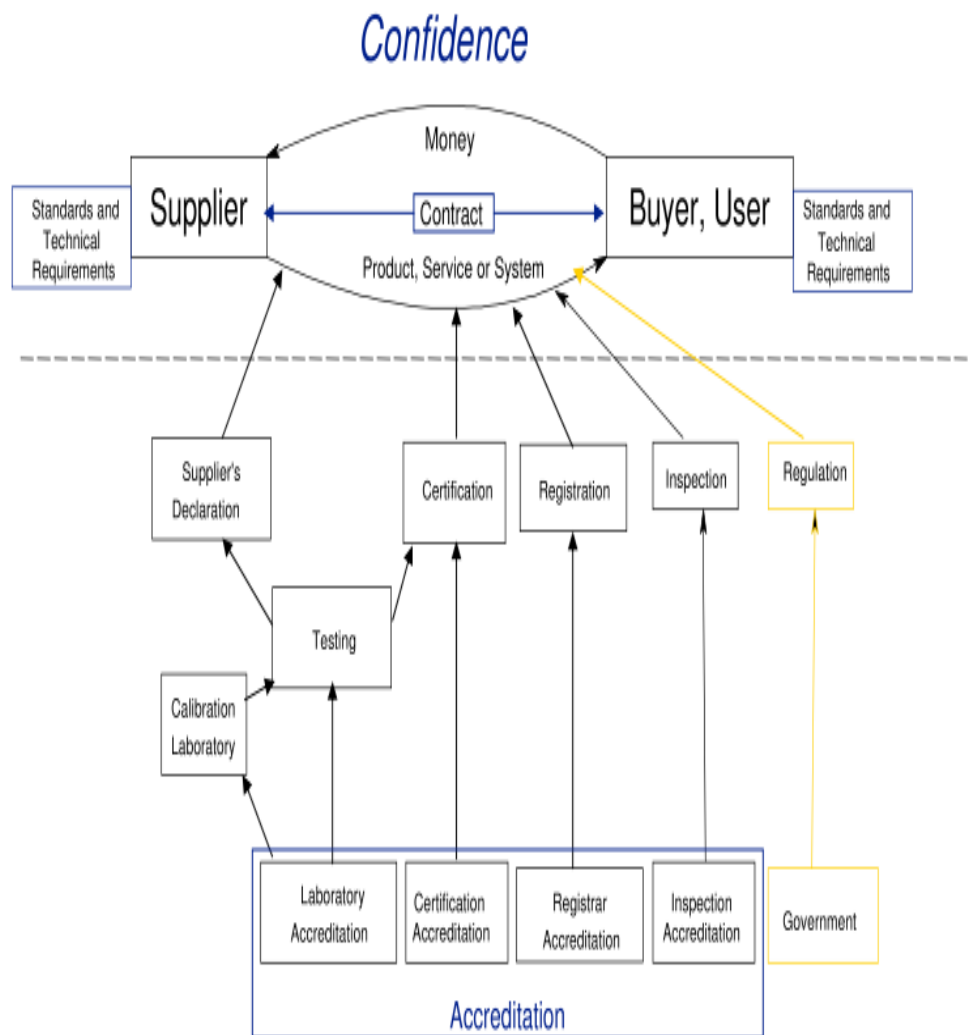


그림 2-6 적합성 평가에 대한 각자의 역할

아래 <표 2-2> 미국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체계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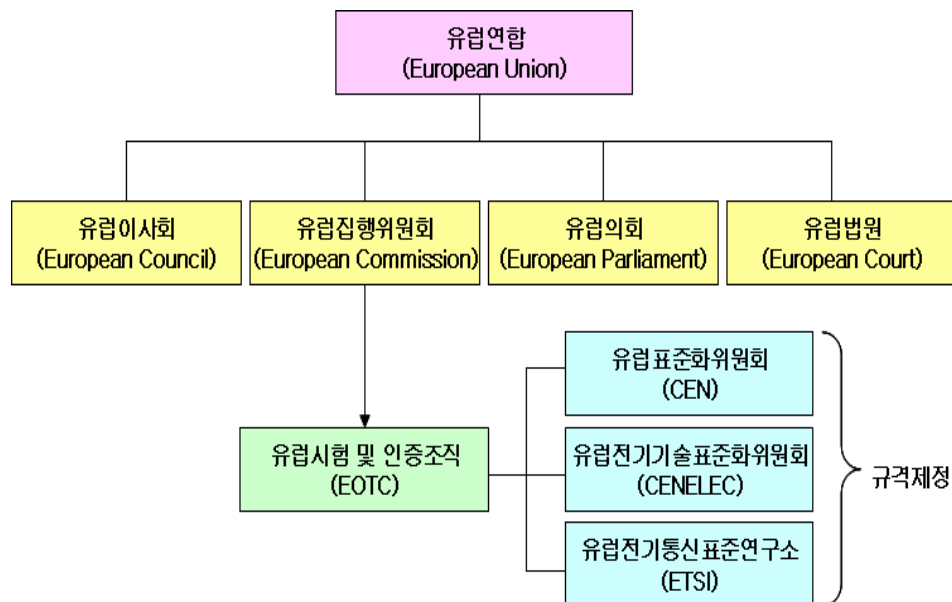
구분		미 국			
		자체증명 (Verification)	적합성 선언제도		인증 (Certification)
			적합선언(DoC)	제조사 적합선언(SDoC)	
		무선기기	무선기기, 정보기기	유선기기	유선기기, 무선기기, 정보기기
		대부분의 ISM장비, TV, FM리시버, 기타 디지털 장비, Pt-to-pt , Microwave, 광대역 전송장치, 인마셋 장치, 406	컴퓨터 및 주변기기, TV 인터페이스 장비(VCR 등), 이용자용 ISM장비 등(전자렌지 등), 대부분의 수신장비	PSTN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제품	대부분의 전송장치, Scanning Device, Radar detector(DoC/SDoC 장치)
규 제		FCC			
지 정		NIST			
승인					
인 정	인증기관 인정				NIST/ANSI
	시험기관 인정		NIST	NIST/A2LA	
등록기관				ACTA	ACTA
인증기관					FCC, TCB
시험기관		제한없음	NIST 승인 시험기관	제조사 부설시험기관 또는 제3의 시험기관	TCB
인증절차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자체보관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DoC 발행(신청자) ↓ 자체보관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SDoC 발행(신청자) ↓ ACTA 등록(신청자)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인증신청(FCC/TCB) ↓ 인증서 교부(FCC/TCB) ↓ ACTA 등록(FCC/TCB)
사후 관리	인증기관				FCC/NIST 공동 담당
	시험기관				
	인증기기	FCC/TCB 합동관리			
	미인증기기				

표 2- 2 미국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체계

제 2절 유럽 인증제도

1. 개관

EU는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조직으로는 EOTC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이 있으며, 이 조직 내에 표준과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ETSI)의 3개 표준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자료원: ETRI(2006), “유럽의 CE 인증제도”

그림 2-7 유럽연합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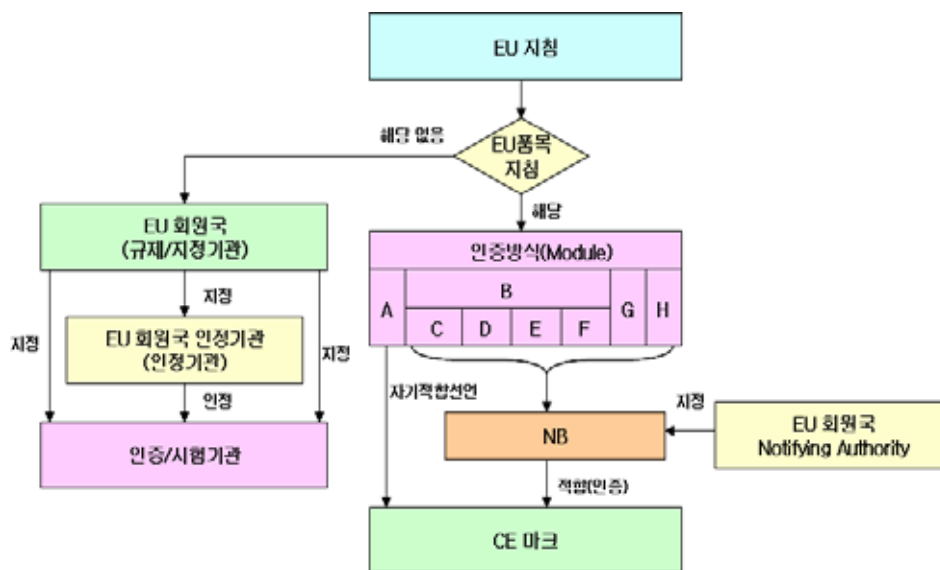
상기 기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표 2 - 3>에 정리되어 있다.

기관명		역할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의 주요사항의 논의 및 발전방향을 제시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입법권, 예산심의 승인권, 대외협상개시 승인 및 협약 체결권, 주요정책결정권을 가짐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법률안을 제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의 정책관리 및 실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의 법률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무역협력과 관련한 국가간 협정의 교섭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법안을 통과시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의 기관(특히, 집행위원회)을 감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사회와 함께 예산을 결정함
유럽법원 (European Court)	Court of Justic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 법안 역할의 확정
	Court of Auditor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연합 활동의 재정 체크
유럽표준화위원회 (CE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기분야이외의 부문에서 표준화 활동 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럽규격을 계획, 편집, 선택하는 기능 수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격제정 : ISO/IEC 규격에 기초
유럽전기기술표준화 위원회 (CENELEC)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기기술분야 표준화 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격제정 : IEC 규격에 기초
유럽전기통신표준 연구소 (ETS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과 방송의 공통분야에서 유럽통신 표준 제정

- 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 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표 2-3 유럽연합의 주요기관 및 역할

EU의 인증체계는 크게 유럽내에서 통용되는 CE 마크의 모듈별 인증 체계와 유럽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별 인증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이 특정한 EU 지침에 해당되면 해당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된다. 만약, EU 지침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회원국의 규정에 의거해 인증을 받으면 된다. 아래 그림은 EU의 인증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원: 유럽 인증제도 개요 및 적합성평가 모듈(2007.3.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림2-8 유럽연합의 인증체계도

2. CE 승인

가. CE-Mark Directive

- 유럽 내 모든 국가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 공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도안된 제도이다.
- EU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은 관련 Directive에 따라 제품이 시장판매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의해 CE Mark를 부착한다.
- CE-Marking은 EU지역 내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강제화.
-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자료(TCF)는 제품의 최종 공급 시점 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나. CE-Mark의 의미

- CE 마크는 생산된 제품이 EU의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제조업체 스스로 또는 제3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다.
- EU는 고객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일정한 규칙과 지침을 세워놓고 EU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이들 규칙과 지침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 CE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별도의 검사와 시험 없이도 EU시장 내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CE규정 또는 지

- 침, CE표준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한다.
- CE 마크가 없으면 EU 지역 내에 판매 및 유통이 사실상 어렵다.

다. CE-Mark의 특징

- CE 마크는 Certification Mark가 아니다.
- 제조자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자료(TCF,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다.
- 제품에 반드시 CE 마킹을 해야 한다.
- 제조자 또는 EU 내에 있는 현지 책임자(Authorized Representative)가 제품규격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 CE 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Global Approach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을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을 정하고, 8개의 모듈방식을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라. 적합성 평가 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1990년 EU 집행위는 CE마킹 지침서에 일련의 적합성 평가절차인 90/683/EEC 지침서를 채택한다.
이 지침은 모듈A에서 모듈H까지 8가지 적합성 평가절차를 갖고 있으며, 제조자의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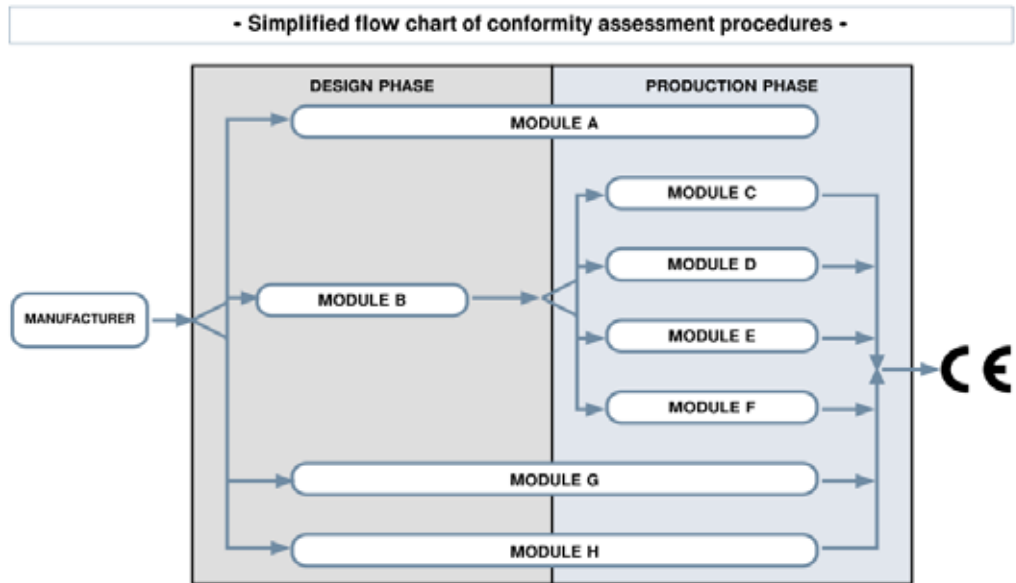


그림 2-9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Flow Chart

- 적합성 평가절차인 8개의 모듈은 설계부분과 생산부분 양쪽을 평가하게 되어 있음.

○ 모듈 A (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적합성 평가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이한 방법으로 자기적합성 선언이다.

당국의 요구에 대비해서, 설계나 성능의 기술문서를 스스로 또는 대리인에게 보관해 두어야 하며 제조자는 CE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선언하고 CE 마크를 부착한다.

CE 지침에 대한 적합성평가는 제조자 또는 독립된 시험기관이 하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다.

○ 모듈 B (EC Type-Examination)

의료기기지침 등 일부지침에서 사용되는 적합성 평가방법으로 설계 단계에 있어서 기술문서와 제품샘플이 요구되어짐. 인증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문제가 없으면 적합성인증서를 발행한다.

이 단계만으로는 CE 마크를 부착할 수 없고 모듈 C, D, E, F에 의해 보충되어야 함.

○ 모듈 C (Conformity to Type)

제조자는 모듈 B에서 인증된 것을 근거로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한다. 모듈 C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모듈 D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제조자는 ISO9002 에 적합해야 되고 인증기관의 절차에 따라 생산에 대한 품질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 모듈 E (Product Quality Assurance)

제조자는 ISO9003 에 적합해야 되고 인증기관의 절차에 따라 제품에 대한 품질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 모듈 F (Product Verification)

모듈 B와 생산 단계에 대해 인증기관이 조정한다.

○ 모듈 G (Unit Verification)

설계단계와 생산단계에서 개별제품에 대한 적합성시험을 인증기관이 시행한다.

○ 모듈 H (Full Quality Assurance)

제품설계, 생산, 최종검사 등의 일련의 과정을 ISO 9001 품질시스템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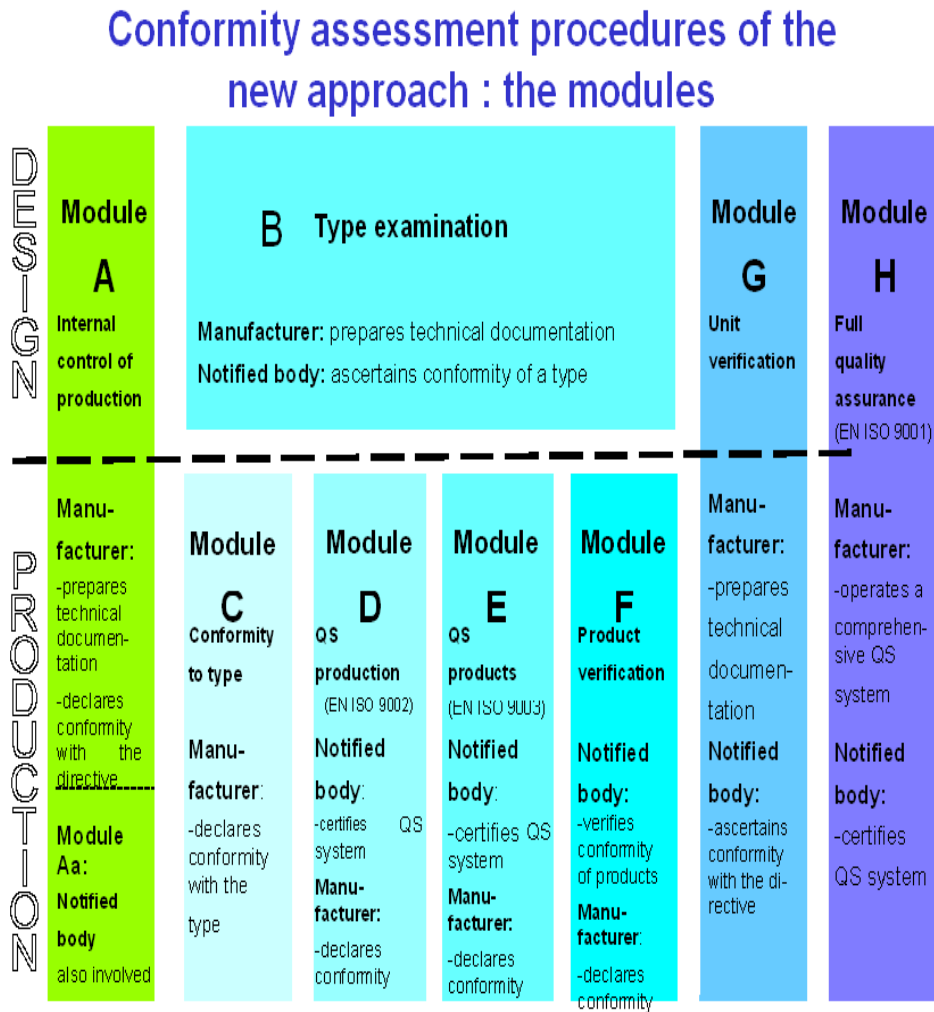


그림 2-10 모듈별 적합성 평가절차

마. EU 지침의 종류와 적용 모듈

No.	Directive 명	대상품목	관련 EC지침	적용모듈
1	기계류(MD)	산업용기계류	98/37/EC	A, B+C
2	저전압기기 (LVD)	AC50V-1000V,DC75V-1500V 전기제품	73/23/EEC	A, Aa
3	전자파적합성 (EMCD)	전기,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89/336/EEC	A, B+C
4	의료기기 (MED)	대부분의 의료기기	93/42/EEC(2000/70/EC)	B+D, B+F, H
5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IMD)	인슐린펌프등	93/68/EEC	H, B+D, B+F
6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혈액검사기	98/79/EC	B+C, B+D, H
7	승강기(LD)	승강기	95/16/EC	B+C, B+D, H
8	방폭기기 (ATEX)	방폭 제품	94/9/EC	A, B+C, B+D, B+E, B+F, G
9	완구의 안전 (TD)	어린이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 장난감등)	88/378/EEC	A, Aa, B+C
10	단순 압력용기(SPVD)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87/404/EEC	B+C, +F

11	가스기기	가정용 가스 기구	90/396/EEC	B+C, B+D, G B+E, B+F
12	통신단말기 (R&TTED)	유, 무선통신 단말기	1999/5/EC	A, H 및 부 속서IV참고
13	비자동 저울	산업용,의료 용 계량기	90/384/EEC	B+D, B+F, G
14	개인보호장비 (PPED)	개인보호장구	89/686/EEC	A, B+C, B+D, B+E
15	온수 보일러 (에너지효율)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92/42/EEC	B+C, B+D, B+E
16	건축 자재 (CPD)	시멘트,타일, 위생도기,목 재문,회전문 등	89/106/EEC	지침서의 부 속서에 따라 평가
17	냉동기기(에 너지효율)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 너지효율 요 구사항	96/57/EC	A
18	압력기기 (PED)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97/23/EC	압력기기의 등급에 따라 적용
19	민수용 폭약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 류	93/15/EEC	B+C, B+D, B+E, B+F, G
20	레크레이션 선박(RCD)	소형선박	94/25/EC	B+C, B+D, B+F, G, H

표 2-4 Directive별 모듈구분

바. 유무선 통신규격 지침(R&TTE Directive) 요구사항

- 무선기기(Radio equipment)와 통신기기(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에 대하여 Directive 1999/5/EC에 의거, TTE Directive가 2000년 4월7일부터 R&TTE Directive로 대체되었다.

규정	방법	표시위치			Examples
		제품	매뉴얼	포장	
적합성 평가	관련기술기준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구성				
Identification	모델명, 제조자명, S/N 등 명시	●			
Marking	CE Marking (+NB number)	●	●	●	CE CE XXXX
사용 용도	사용용도 직접 기술 시각적으로 표현 일반인에게 알려진 용어 사용		●	●	포장에 삽화, 매 뉴얼에 사진삽입 등, Modem,
Network Interface	직접 기술(설명) 일반인에게 알려진 용어 사용	☑	☑	☑	This telephone is intended for connection to the FR-analogue network,
DoC	- TCAM6(00)30 문 구 + DoC제공 - Full DoC를 제품 과 함께 제공		☑	☑	

표 2-5 R&TTE Directive 지침서 내용

Route to Compliance	Frequency Allocation	NB used	Marking
Standards route	Harmonized	No	CE
		Yes	CEXXXX
	Non-Harmonized	No	CE!
		Yes	CEXXXX!
Technical Construction File (TCF) route	Harmonized	Yes	CEXXXX
	Non-Harmonized	Yes	CEXXXX!
Full Quality Assurance route	Harmonized	Yes	CEXXXX
	Non-Harmonized	Yes	CEXXXX!

그림 2-11 CE 마킹

◦ TCAM6(00)30 문구 + DoC 사본 위치 / DoC original language

예1) Hereby, [Name of manufacturer], declares that this [type of equipment]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1999/5/EC.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may be consulted at
www.aaaaaaa.com/DoC.pdf.

예2) Hereby, [Name of manufacturer], declares that this [type of equipment]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1999/5/EC. + 제조자의 언어로 된 DoC

◦ Full DoC

제조사명, 제조자 주소, 제품설명(제품명/모델명), 사용된 기술기준, 사인 등

Declaration of Conformity	
<p>Manufactur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p> <p>Address</p> <p>Declares that the following product</p>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margin: 5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Name of product, type or model, batch or serial number)</p> <p>conforms to the technical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product within the scope of the Low Voltage Directive 73/23/EEC, the EMC Directive 89/336/EEC and the R&TTE Directive 99/5/EC:</p> <p>LVD EMCD R&TTED</p> <p>All essential test suites have been carried out. The relevant technical file is available for inspection.</p> <p>Notified Body</p> <p>Address</p> <p>This declaration is issued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 and, if applicable,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p> <p>Point of contact</p>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margin: 5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Name, telephone and fax numb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width: 45%;">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margin: 5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Place, date of issue)</p> </div> <div style="width: 45%;">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margin: 5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Signature)</p>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margin-top: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Name and title in block letters)</p> </div> </div>	

그림 2-12 DoC Form 샘플

◦ Article 3. 필요한 요구조건

- Article 3.1 (a) LVD 73/23/EEC Health for Radio (Human Exposure to EMF)
- Article 3.1 (b) EMCD 89/336/EEC
- Article 3.2 Use of Spectrum

◦ Human Exposure to EMF

- 유럽은 모든 무선 송신기에 대하여 규제함.
- Council Recommendation of 12. July 1999 on the limitation of exposure of the general public to electromagnetic field (0Hz ~ 300GHz)
- Basic restrictions (SAR / Power Density)
- Reference level (Field strength / Power Density)
- Standards
 - a) Potable and mobile devices (SAR) --> EN 50360:2001, EN 50361:2001
 - b) Base stations and fixed terminal stations (SAR/Field strength) --> EN 50385:2002, EN 5050383:2002
 - c) EAS, RFID, and similar application --> EN 50364:2001, EN 50357:2001
 - d) Generic Standards (without Test - average RF output power $\leq 20\text{mW}$) --> EN 50371:2002

사. 전자파 규격 지침(EMC Directive) 요구사항

◦ 기본 규격(Basic Standard)

- 기술분야 별로 시험방법 규정, 합/부 판정기준은 정하지 않음.
- 측정기기, 측정장소의 규격과 적합성 확인절차
- CISPR16 Series, EN61000-4 Series 중심으로 된 규격

시험 방법	국제	유럽	한국		중국
정전기방전 내성	IEC61000-4-2	EN61000-4-2	KN61000-4-2	K61000-4-2	GB/T 17626.2
전자파방사 내성	IEC61000-4-3	EN61000-4-3	KN61000-4-3	K61000-4-3	GB/T 17626.3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	IEC61000-4-4	EN61000-4-4	KN61000-4-4	K61000-4-4	GB/T 17626.4
서지 내성	IEC61000-4-5	EN61000-4-5	KN61000-4-5	K61000-4-5	GB/T 17626.5
전자파전도 내성	IEC61000-4-6	EN61000-4-6	KN61000-4-6	K61000-4-6	GB/T 17626.6
전원주파수자계 내성	IEC61000-4-8	EN61000-4-8	KN61000-4-8	K61000-4-8	GB/T 17626.8
전압강하 순간정전	IEC61000-4-11	EN61000-4-11	KN61000-4-11	K61000-4-11	GB/T 17626.11

표 2-6 EMS Basic Standard

◦ 공통 규격(Generic Standard)

- 제품군 규격이나 제품규격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합/부 판정을 위한 기준규격(시험절차는 정하지 않음)
- 주거용, 상업용, 경공업용 및 공업용 등 사용 환경별로 구성된 기술규격
- EN61000-6-1, EN61000-6-2, EN61000-6-3, EN61000-6-4 등

◦ 제품군 규격(Product Family Standard)

- 특정한 제품군(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기류, 가정용기기류 등)에 대한 기술규격
- EN55011, EN55013, EN55014-1, EN55014-2, EN55020, EN55022, EN55024 등

제품 및 환경	국제	유럽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정보기술 장치류	CISPR 24	EN 55024	KN 24	-	GB/T 17618
전기기기, 전동기기류	CISPR 14-2	EN 55014-1	K 00014-2	-	GB 4343.2
방송용 수신기기류	CISPR 20	EN 55020	K 00020	-	GB 4343
측정 기기류	IEC61326	EN 61326	-	-	GB 9383
저전압 공급기	IEC61204-3	EN61204-3	-	-	-
선박항법 통신시스템	IEC60945	EN60945	-	-	-
주택 환경	IEC61000-6-1	EN61000-6-1	K 61000-6-1	-	-
공업 환경	IEC61000-6-2	EN61000-6-2	K 61000-6-2	-	-

표 2-7 제품군 별 EMS규격

제품 및 환경	국제	유럽	한국	미국	일본	중국
ISM 기기류	CISPR 11	EN 55011	K 00011	FCC Part 18	전파법	GB 4824
A/V 기기류	CISPR 13	EN 55013	K 00013	FCC Part 15	J 55013	GB 13837
전기기기, 전동기기류	CISPR 14-1	EN 55014-1	K 00014-1	-	J 55014	GB 4343
정보기술장 치류	CISPR 22	EN 55022	KN 22	FCC Part 15	VCCI V-3	GB 9254
주택 환경	IEC6100 0-6-3	EN6100 0-6-3	K61000- 6-3	-	-	-
공업 환경	IEC6100 0-6-4	EN6100 0-6-4	K61000- 6-4	-	-	-
고조파 전류	IEC6100 0-3-2	EN6100 0-3-2	-	-	C61000- 3-2	GB 17625. 1
플리커	IEC6100 0-3-3	EN6100 0-3-3	-	-	C61000- 3-3	GB 17625. 2

표 2-8 제품군 별 EMI규격

◦ 제품 규격(Product Standard)

- 특정한 제품의 합/부 판정규격
- EN60945, EN60533, EN61326, EN61131-2, EN61204-3 등

3. NB (Notified Body)

가. EU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평가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EU 가맹국의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각 지침마다 유럽 위원회에 등록(통지)되어진 제3자 기관으로서 CE 인증서를 발행하며 NB는 유럽 위원회로부터 공표되어진다.

지 역	국가 (NB 수)	소계	총계
EU	Austria (32), Belgium (19), Denmark (22), Finland (15), France (75), Germany (204), Greece (14), Ireland (4), Italy (179), Luxembourg (5), Netherlands (30), Spain (48), Portugal (21), Sweden (48), United Kingdom (206)	918	969
EFTA (유럽자유무역 연합)	Iceland (2), Norway (14)	16	
MRA-PECA	Australia (5), United States (13), Czech Republic (13), Hungary (4)	35	

표 2-9 NB의 국가별 분포

- 27개 EU 가입국과 3개 EFTA 가입국에서 인증받은 NB는 2008년 2월까지 약 1,8000개 이상임.
- 유럽지침에 따라 인증받은 NB는 고유의 NB 번호를 부여받음. (예: CE 0678)
- 유럽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NB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표됨.

Directive Code	Directive 명	NB 수
87/404/EEC	Silimple Pressure Vessels	75
88/378/EEC	Safety of Toys	54
89/106/EEC	Construction Products	151
89/336/EE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35
89/686/EEC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96
90/384/EEC	Non-automatic Weighting Instruments	321
90/385/EEC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18
90/396/EEC	Appliance Burning Gaseous Fuels	35
92/42/EEC	Hot water Boilers	37
93/15/EEC	Explosives for Civil uses	6
93/42/EEC	Medical Devices	60
94/25/EC	Recreational Craft	21
94/9/EC	Equipment &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27
95/16/EC	Lifts	124
96/48/EC	Interoperability of the Trans-European high-speed Rail System	11
96/98/EC	Marine Equipment	27
97/23/EC	Pressure Equipment	58
98/37/EC	Machinery	135
98/79/EC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14
99/36/EC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43
99/5/EC	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40
2000/14/EC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7

표 2-10 Directive (지침)별 NB 현황

4. 사후관리 (Market Surveillance)

가. 사후관리의 원칙

- Reference Guide
 - Section 411 (Market Surveillance : Principles of EMC & R&TTE)
 - GHTF SG2 N61R4
- New Approach Directive의 주된 목적은 EU시장 내에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적절한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며, 사후관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자유로운 경쟁은 공정한 경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감안, 사후관리는 필요 요구사항 등을 무시하여 제품단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문제가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주목한다.
- 해당 국가들은 사후관리를 위한 기구를 반드시 지정 또는 설립해야 하며,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또는 행정 관련 필요요건들을 제공해야 한다.
- 사후관리 기관은 모든 제조업체, 수입업체, 공급자 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 사후관리 기관은 결점이 있는 제품의 검출 및 적절한 시험을 위해 필요한 수반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 행정 및 관리상의 결점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나. 사후관리 기관의 역할

- 사후관리 기관은 다음 두가지 주된 업무를 갖고 있음
 - 모니터링 업무

해당 국가의 사후관리 기관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적용되는 법적 요구조건에 만족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모니터링 목적은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 또는 서비스가 개시되는 시점에 있어 제품이 적용 지침에 적합한지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DoC 와 기술문서는 제품의 필요 정보와 함께 사후관리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시정 명령 (Corrective 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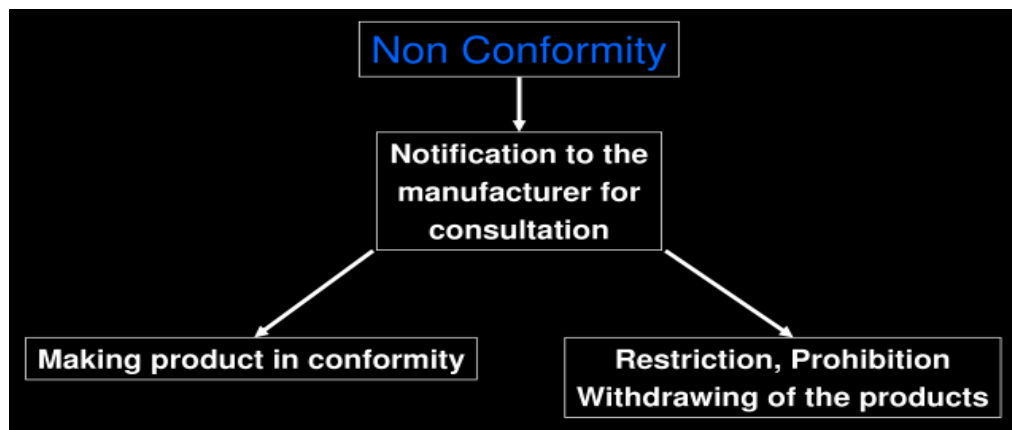


그림 2-13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적합성에 대한 시행 명령을 해야 한다.

사후관리 기관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제조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제품의 적합성 확보의 권고 또는 EU 시장 내의 제한,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기관은 CE마킹 지침의 준수를 감시해야 하며, CE마킹의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사후관리 기관은 CE마킹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되어 제품의 유통

을 제한시킬 때에는 EU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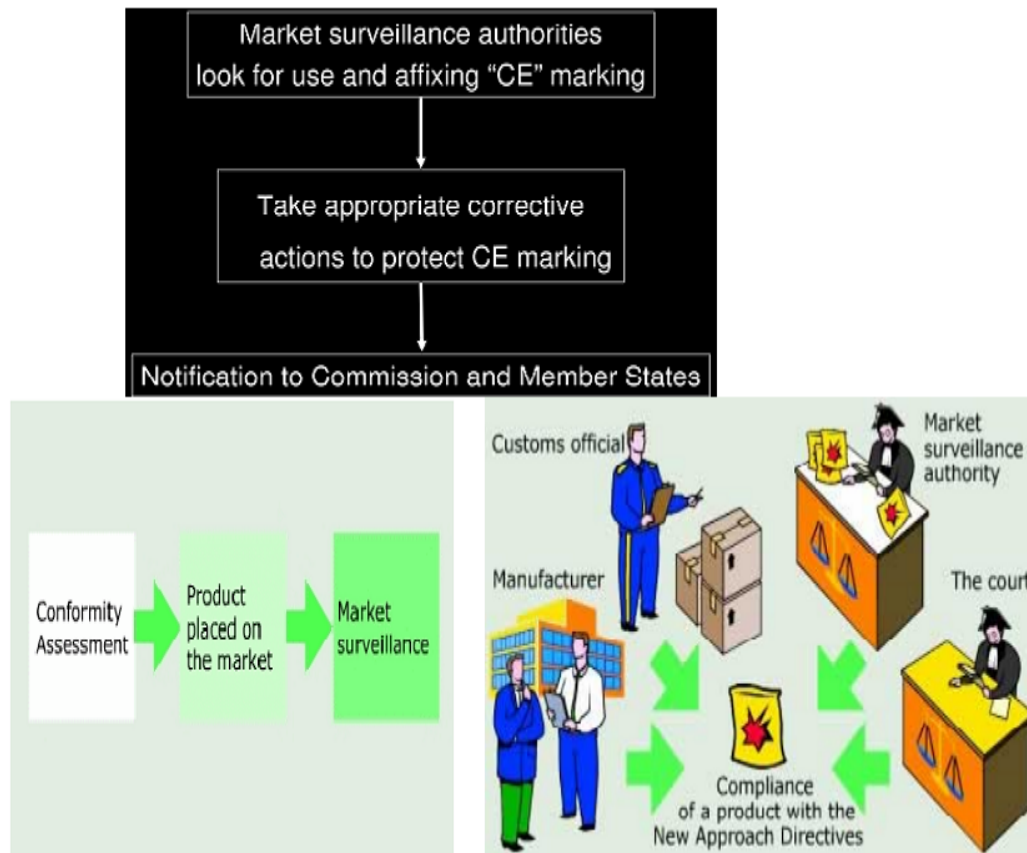


그림 2-14 사후관리의 법적 Flow

○ 사후관리 당사자 (Market Surveillance Actors)

The **Manufacturer**, before the product has been placed on the market.
 The **Customs official**, for products originating from outside the EU.
 The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after the product has been brought onto the market.
 The **Court**, when an incident occurs.

제품의 적합성평가는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관리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부터 이루어진다.

세관은 다음 두 가지의 경우, 제품의 EU 내 반입을 제재할 권리를 갖고 있다.

- (1) 인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의혹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판단될 때
- (2) 제품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문서가 없거나 제품의 적용규칙에 맞지 않는 마킹이라 판단될 때

◦ Regional Office(지역사무소)의 업무

- 부적합을 발견하였을 때, 청문회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소송 또는 제품의 개선, 적합선언의 수정을 하며, EMVG 9조에 의거하여 판매금지를 명령함.
- 제시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EMVG 9조에 의거하여 강제벌금을 부과하며, 최고 5만 유로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음.
- EMC Directive 및 R&TTE Directive 제9조에 의거, Safeguard를 실시하기 위한 판매금지를 통지함.
-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사후심사할 대상제품을 통보함.
- 제품의 형식, S/N, 시장투입의 책임자 명칭, 유통 루트의 확인, 인터넷 확인 등의 절차로 정보를 수집함.

다. 발취 방법 및 평가 방법

-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발취할 장소를 결정하며, 동일 공급업체의 샘플

발체는 피하며 공급업체가 아닌 가능한 한 제조업체로부터 샘플을 발체하여야 한다.

◦ 실효성 있는 샘플 발체

- EMC 대상시험 요소가 있는 샘플의 선택
- Low Cost 제품 (상대적으로 부적합이 예상됨)
- 기술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
- 시장에서 감시 또는 상세한 조사 실적이 없었던 제품
- 문제 제품의 탐색
- 시장 감시를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그룹을 확립함
- 경험과 훈련이 풍부한 시장 감시 활동에만 책임을 지는 스텝으로 구성함.

◦ 평가 방법

1999년 이후 사용되고 있는 3단계 평가방법




측정불확도	구 분		평가
▲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이 명백함 ● 판매자에게 문제점의 수정을 요구함 ● 판매금지의 가능성
+1.5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을 입증 가능함 ● 보호 요구사항을 영수하지 않음 ● 개선할 것을 요구함
+1.0			
+0.5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플 측정치가 Limit를 초과함 ● 판매자에게 비공식 통지함
0.0 (Limit)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을 입증 가능 ● 보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
▼			

그림 2-15 사후관리 3단계 평가방법

라. Safeguard Clause

- New and Global Approach 지침서가 제품의 EU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증하지만, 위험한 제품은 시장으로부터 회수해야 되는 책임을 EU 가입국들은 가지고 있다.
- Safeguard Clause는 New and Global Approach 지침서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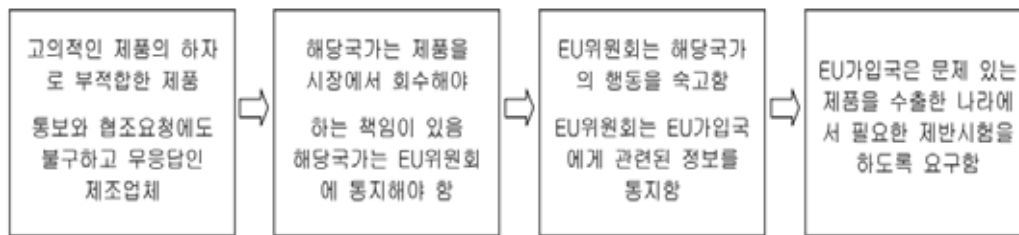


그림 2-16 Safeguard 절차도

Break down of measurements to product groups						
Breakdown of products covered by the EMC Directive according to product groups						
Product group	Product series tested	non-compliant series	Individual products tested	non-compliant individual products	Percentage non-compliant series 2007	Percentage non-compliant series 2006
Domestic appliances	256	70	23	5	27%	27%
Power tools	204	43	10	5	21%	26%
Lighting equipment	266	61	1	0	23%	30%
IT and office equipment	108	41	40	18	38%	32%
Consumer electronics	282	127	7	3	45%	57%
Industrial equipment	8	3	3	2	38%	40%
Scientific equipment	4	3	2	0	75%	0%
Installation materials	48	15	0	0	31%	23%
Miscellaneous	0	0	0	0	0%	0%
Breakdown of products covered by the R&TTE Directive according to product groups						
Product group	Product series tested	non-compliant series	Individual products tested	non-compliant individual products	Percentage non-compliant series 2007	Percentage non-compliant series 2006
Telecoms terminal equip.	70	17	0	0	24%	26%
Radio equipment	198	54	4	3	27%	26%
Combined equipment	31	1	0	0	3%	0%

참고 자료 (Market Surveillance 2007, Federal Network Agency)

그림 2-17 2007년 사후관리 분석도

제 3절 일본 인증 제도

1. J-MIC 승인

가. J-MIC (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

◦ 전기통신기기 와 무선기기의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기, 팩시밀리, PABX ● ISDN, 터미널 Devices 	<p>핸드폰 무선전화기 WL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투스, 무선 랜 ● 특정소출력 및 Security 기기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표 2-11 대상기기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파법에 따른 통신인증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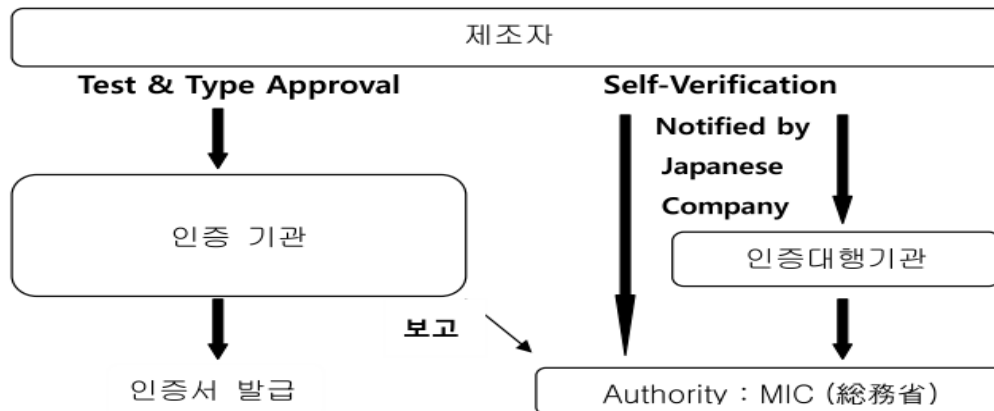


그림 2-18 인증 진행방법

◦ 타입별 통신기기 인증(유선기기)

Certification of Individual Item Certification of Design Specif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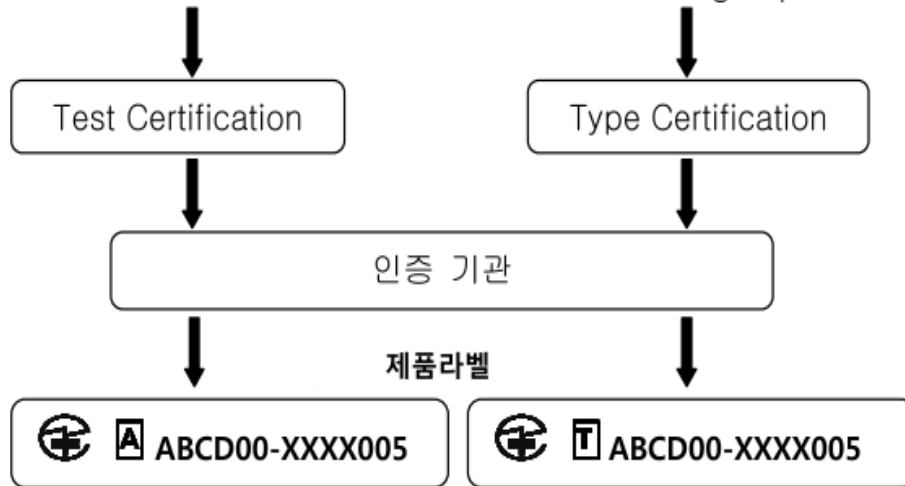


그림 2-19 유선통신기기의 인증절차

◦ 타입별 통신기기 인증(무선기기)

Approval of Individual Item Approval of Design Specifications



그림 2-20 무선통신기기의 인증절차

◦ 유선통신기기의 Self-DoC 개념 도입(2004. 1. 16)

구분	설명	인증기관
기술기준 (Technical Conditions)	설계인정(設計認證) – Type approval – Design Certification	등록인증기관 Self – DoC
	적합인정(適合認定) – Single unit – Compliance Certification	등록인증기관
기술적조건 (Technical Requirements)	설계인정(設計認證) – Type approval – Model Certification	등록인증기관
	적합인정(適合認定) – Single unit – Single unit Certification	등록인증기관

표 2-12 기준에 따른 인증형태

◦ 제품군의 분류

기술기준 (Technical Conditions)	전화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PBX, Key Telephone, 기타)
	무선호출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설비
	ISDN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전용통신설비/디지털데이터전송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기술적조건 (Technical Requirements)	이동통신단말기기
	전용통신설비 단말기기
	기타의 통신 단말기기

표 2-13 기준별 대상기기

2.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가. 설명

- 정보처리기기(ITE)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대한 자주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

나. 설립취지

- CISPR의 권고에 따라 우정성(현, 총무성) 전기통신기술 심의회가 1985년 12월에 정보처리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의 허용치 및 측정법에 관한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우정성으로 하여금 관련 업계에 동 내용과 함께 전파방해 방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요청하게 됨.
이에 따라 일본내 관련 4개 단체인 전자공업진흥회(JEIDA), 사무기계공업회(JBMA), 전자기계공업회(EIAJ), 통신기계공업회(CIAJ)가 상호 협력하여 정보 처리장치등 전파장해 자주규제협회인 VCCI를 설립하게 됨.

다. 설립목적

- 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 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으로서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라. 주요사업 내용

- 정보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의 자발적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적합성 인증 보고서의 접수 및 보존, 인증서의 발행
- 시장실태조사 및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
- 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성과발표 및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측정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 교육
- 해외의 EMC 규제동향 조사, 상호 승인 추세를 조사 및 MRA 촉진

마. 대상기기

- 자주규제 조치 대상기기는 일본시장에 수출되는 모든 정보기술기기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대하여 적용함.
- ITE 의 정의
ITE 장비란,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제어 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단자를 갖는 기기를 말함.
- ITE 의 구분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Class A기기 및 Class B기기로 구분됨.
 - Class B 기기
Class B 정보기기의 방해허용치를 만족하는 장비로서, 주로 주거 지역 안, 반경 10미터 이내에서 사용되는 기기
 - (1) 사용장소가 고정되어있지 않는 장비 : 배터리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휴대용 기기
 - (2) 전기통신회선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전기통신 단말장치

(3)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4) 팩시밀리

○ Class A 기기

Class B 기기의 방해 허용치를 초과하나 Class A 기기의 방해 허용치를 만족하는 기기

바. 적합성 확인 (CoC : Confirmation of Compliance)

- 제조자는 자사의 정보기기가 VCCI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기술기준 적합확인 및 신청서를 VCCI에 제출해야 한다.
- 제조자는 자사 제품이 기술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성 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의 적합성 확인시험은 VCCI에 등록된 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사. 적합성 확인 등록 (Registration of Compliance)

- 제품의 적합성 확인시험을 수행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출하 이전에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 적합성 확인보고서를 VCCI에 제출하여 확인서를 받으며, 확인서 발급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3. 사후관리 (Market Surveillance)

가. 사후관리의 규정

- VCCI 내의 시장발체시험 전문위원회는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제9조	시험결과의 통지
제2조	시장선정 전문위원회	제10조	대상기기의 반환
제3조	시험대상기기 선정	제11조	부적합기기의 처리절차
제4조	대상기기의 선정방법	제12조	추가 시험
제5조	회원의 동의	제13조	양식
제6조	시험기관에의 위탁	제14조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취급
제7조	시험 방법	제15조	OEM 제품의 취급
제8조	비밀보장 의무		

표 2-14 VCCI 사후관리 관련 조항

나. 시험대상기기의 선정

- 시장발체시험 전문위원회의 의견에 정하거나 VCCI에서 직접 구매한 다.
- VCCI가 회원으로부터 출하제품 또는 출하제품과 동등한 제품을 대 여한다.

다. 시험 비용

- 시험기기의 반입비용, 회원의 선택에 따라 실시하는 재시험비용은 회 원이 부담한다.
- 재시험비용을 제외한 시험비용은 VCCI에서 연도별 검토하여 부담한다.

라. 시험 방법 및 부적합기기의 처리절차

- 시험기관은 시험 종료 후, 신속하게 시험데이터 및 시험결과를 VCCI에 보고해야 하며, VCCI는 회원이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회원에게 설명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조자는 시장발취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추가시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VCCI는 제조자에게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하며, 제조자는 그 결과를 VCCI에 보고해야 한다.
- 제조자는 시장발취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부적합 정도에 따라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대량 생산된 제품은 불량률이 제12조 2항에서 규정하는 허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시험기관은 대상기기 이외에 제공된 기자재 및 자료를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 VCCI는 시험결과로 최종 부적합이 되었을 경우, VCCI 기관지에 공표하며, 개선조치 및 VCCI 보고가 적절히 되었을 경우는 부적합 제의 형식만을 공표하여야 한다.



VCCI Conformity Reporting to Sampling Test

그림 2-21 VCCI Market Surveillance 절차

다음은 일본의 인증관련 주요기능, 관련 기관 및 관련 업무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기관의 주요 기능	담당기관	관련 담당업무
규제기관 Regulatory Authority	총무성	- 인증규제의 개발
등록기관 Registering Authority 지정기관 Designating Authority	총무성	- 일본국 및 외국의 시험 및 인증업체가 일본국 내 시험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업무 수행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JAB (Japan Accreditation Board) (재단법인) 일본적합성인정협회	- 외국과의 MRA 시 활용하는 인정기구 - 적합성평가체계의 거의 모든 분야의 인정을 실시 (경영시스템, 시험소, 직원, 제품)
시험기관 Testing Body	o 단말기기 및 무선설비: 일반시험기관 o 지정시험기관 제도 폐지('04.1) (시험능력이 있는 제조자는 누구나 시험성적서 발행가능) o 정보기기: VCCI 승인시험기관 o SDoC에 의한 자체시험	- 단말기기, 무선설비, 정보기기 등에 대한 시험업무 *인정시험사업자(단말기기) 및 인정점검사업자(무선설비) 역할 폐지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o 등록인정(증명)기관 (개편전: 지정인정기관) (직접시험가능) - JATE, TELEC - DSPR, Chemitox - JARD(아마추어무선국 협회) - TUV(추후라인란드)동경지사	- TELEC 및 아마추어무선국 연맹은 특정무선설비에 대하여 인증하고 있음. - 기타 인증기관은 전기통신단말기기 및 특정무선설비 인증업무를 병행함

자료원: ETRI(2006), 일본의 인증제도

표 2-15 일본의 인증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제 3 장 통합 인증관리법률(안) 제정

제1절 현행 법령 체계 분석

1. 개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인증과 관련된 법령체계는 다소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이는 독임제 정부부처인 정보통신부 체제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체제로 변화하면서 각종 법령 제·개정 권한이 제약되는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부와 같은 독임제의 정부부처는 각종 규제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독자적 부령 제·개정권을 가지지만, 대통령이나 총리 소속 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따른 법령 집행권만을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도의 신설이나 개편을 위해서는 최소한 법률 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대부분의 사항을 규율하고 기타 내부적 처리절차만을 위원회 고시로서 정하여야 하는 제약을 지닌다.

이러한 일반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 정부조직개편작업의 결과 구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합의제 성격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부처 법령운영구조에 맞추어 제 개정되었던 법률-대통령령-부령-고시 운영 체제를 위원회 법령운영구조에 맞도록 법률-대통령령-고시 체제로 재편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의 법령 체계 개편의 작업은 기존의 정보통신 인증제도를 운영할 때 각종 법령 운영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부각시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

가. 조직개편에 따른 법령 운영체계의 문제

우선 정보통신부라는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위원회조직으로 개편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부령 제정권이 소멸됨에 따라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전 정보통신부의 인증제도 운영체계는 전파법과 기본법에서 인증제도의 기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가 독자적으로 발하는 부령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이나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령과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고시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인증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규율할 수 있었다⁶⁾.

6) 다만 이체계에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이나 부령의 근거하지 않은 권리침해적 사항등을 고시에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문제는 있어왔다 이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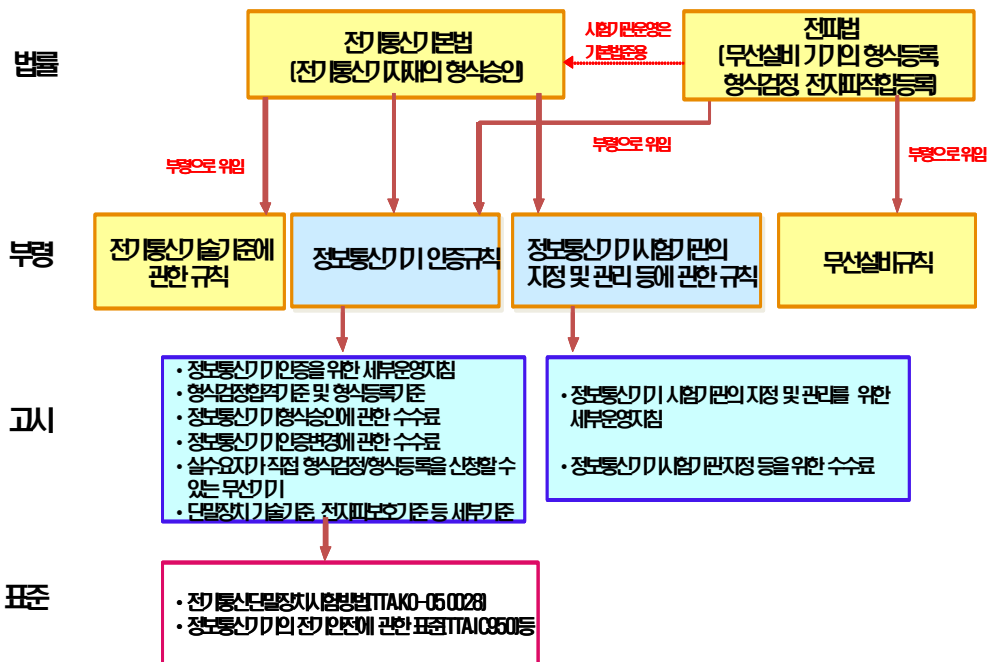


그림 3 - 1 조직개편 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운영체제

조직 개편 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는 유선분야의 형식승인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무선분야인 형식등록, 형식검정,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사항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의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규칙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서 다루고,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서 이원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통합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의 이원적 운영을 보완하여 주던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과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령 제정권 상실로 폐지되면서, 부령 규정

사항이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일부는 전파연구소 고시로 분리되고,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험인증 제도 운영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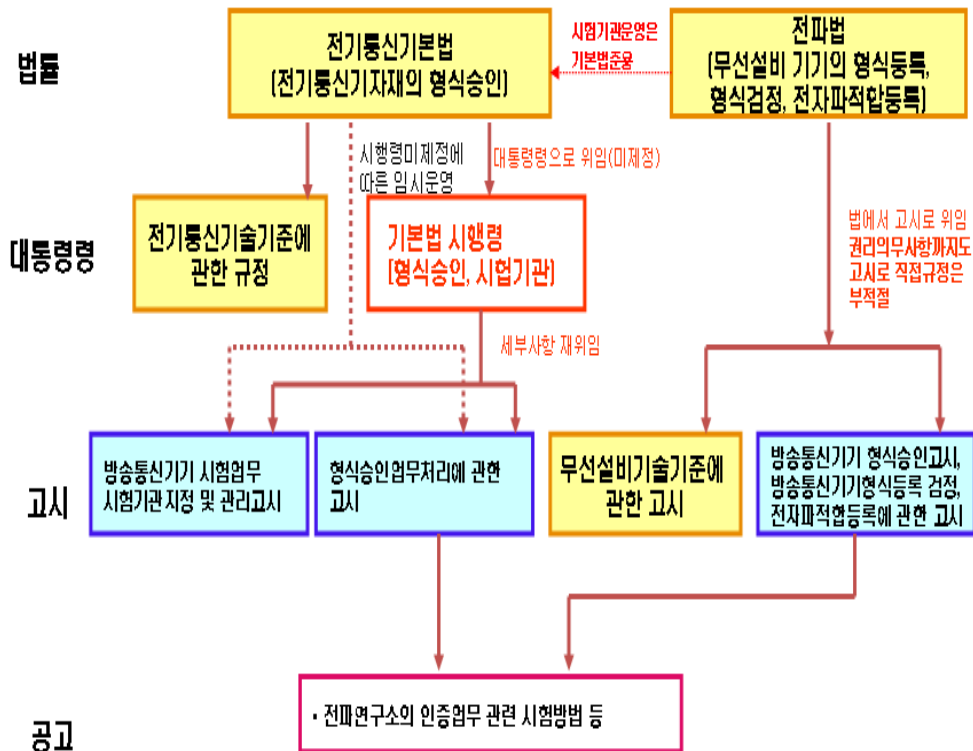


그림 3 - 2 조직개편 후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운영체제

조직 개편 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전기통신기본법이나 전파법은 예전과 같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또는 무선설비의 기기의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파연구소의 고시에서만 방송통신기기의 명칭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 인증제도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설사 정보통신기기이나 방송통신기기의 명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의 인증제도의 관련된 세부 위임 체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제도를 다룸에 있어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하는 형식승인 제도의 경우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토록 하는 구조를, 전파법에 근거하는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제도는 고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인증관련 법제도 운영상에 큰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이한 위임체제로 인하여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고시의 운영주체도, 방송통신기기 형식등록, 검정,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파연구소가 관할하고 있어, 이 역시도 인증제도의 일관된 운영측면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종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 중인 전파연구소의 고시 제정권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 공고형식으로 발표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법령의 지속효력을 고려한다면 부적절한 형태로 판단된다.

나.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불일치적 규제에 따른 문제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앞서의 부령이 폐지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기존의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상이한 규제 체제를 보완하여 주던 입법적 보충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이 다음의 표와 같이 상이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소지들을 예전에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서 입법적 보충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물론 금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인증규칙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혹은 전파연구소 고시로 흡수하여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고시의 법적 성격상 민원인들에게 법적 기속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파법 및 기본법 상의 상이한 규제 내용	현행 체계의 문제점
1. 인증의 면제 대상 모호 및 체계 일치 화 및 위임범위	- 면제, 부분면제, 복합기기에 대한 면제가 포괄적
2. 변경의 범위 및 절차	- 기본법은 변경의 범위를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전파법은 기술기준등과 관련 있는 사항을 규정 - 관련 고시는 기술기준+기술기준과 무관한 사항을 모두 변경범위와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여 법률 위임범위 이탈
3. 해지 절차	- 기본법은 해지절차가 있으나 전파법은 없음
4. 사후관리 운영체계	- 기본법은 제36조에서 형식승인 사후관리 시행근거를 두고,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인증규칙에 위임 - 전파법은 제53조에서 포괄적 조사조치권을 둔 후, 형식등록등의 사후관리 시행근거는 전파법 시행령에 둠

5. 사후관리 시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은 제36조 제4항에서 사후관리시 고지 및 증표제시 의무 규정 - 전파법은 제53조의 조사조치시 증표제시 의무 시행령 규정
6. 행정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은 별도규정없음 - 전파법은 시행령에 일부사항이 분산규정
7. 권한의 위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인증 업무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근거한 방통위 고시로 일괄 처리됨 - 시행령에서 방통위 고시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같은 시행령에서 전파연 고시로 재위임하는 것은 체계상 부적절
8. 각종 양식 및 수수료 부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부령(인증규칙등)으로 위임한 수수료 (인증 및 시험기관지정), 양식(인증서), 표시(인증마크), 행정처분기준과 인증규칙에서 정한 양식 (각종 신청서, 인증서, 지정서, 변경신고서, 증표) 과 기준(대상기기)의 통합

표 3 - 1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상이한 규제 내용

구체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상이한 규제내용은 인증제도 운영 전반에 발견되고 있다. 우선 법률상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제도를 하나의 인증제도 통칭하던 근거가 사라짐과 동시에, 현행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에서는 인증의 면제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증의 세부적 면제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세부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인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전파연 구소 고시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인증받은 사항의 변경이나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전기통신

기본법이나 전파법에서 각각 대상과 범위를 다르게 규정(변경의 경우)하거나 관련 제도가 부재(해지의 경우)하여 이를 인증규칙에서 보충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전파연구소 고시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분리 규정되어 있다. 세 번째로 사후관리절차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사항도 전기통신기본법이나 전파법은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전기통신기본법의 경우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여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전파법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이와 반대로 전파법이 어느 정도의 세부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 반해 전기통신기본법의 경우 세부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는 예전 인증규칙이나 현재의 관련 전파연구소고시 혹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마지막으로 각종 양식 및 수수료 부과규정도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인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것이 조직 개편 후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파연구소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산재됨으로써 이러한 규정 역시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통합인증관리법 제정의 기본방향

1. 개 요

앞서의 조직개편 이후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인증제도와 관련된 규제자, 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인증제도 이용자 및 적정수준의 품질의 방송통신기기 이용하고 안전한 방송통신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송통신기기 인증관련 입법모델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만 그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의 과도기적 인증제도 운영체계를 통합인증관리법 등과 같은 신규 입법체계의 틀에서 새로이 구성하는 방식과

기존의 입법체계인 전파법 중심의 틀에서 단일화된 운영체제로 개편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모델은 각 모델별로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입법 모델별 특성

가. 전파법 중심의 통합제정모델

이 모델은 앞서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제도 운영체계를 전파법으로 통합 규정하는 모델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전 부처별로 분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전파법으로 통합·정비 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모델이다. 특히 이러한 통합제정 입법모델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이후 예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인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전파법의 무선설비의 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제도가 적용대상기기와 명칭만 일부 다를 뿐 주요 규제목적과 업무절차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착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별도의 신규입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신규제정에 따른 입법부담을 덜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와 설비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전파법에 서비스와 설비의 특성이 다른 전기통신분야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 제정체계상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으며, 이러한 면에서는 신규입법을 통한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 정비하는 필요성이 재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전파법 중심의 통합제정모델을 고려하는 경우 기존 전파법은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되 기존의 이원화된 법률 운영체계

에 따라 일부 상이한 운영체제와 처분기준에 대하여는 우선 완화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비하되, 인증받은 기기 또는 불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 벌칙 및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전파법에 통합하여야 하는 후속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후속입법조치는 전파법 이외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 등 처리고시- 방송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운영 및 관리고시-인증업무 관련 시험방법 등 고시 등으로 나열해 볼 수 있겠다.



그림 3 - 3 전파법 중심의 통합제정모델

나. 통합인증관리법 등과 같은 신규입법모델

이 모델은 현재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제

도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신규입법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동일한 제도를 각기 상이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판단될 때나 기존의 운영제도에 덧붙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결과 기존의 입법으로는 이를 수용하기에 곤란할 때 대내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신규 입법수요가 강하게 요구될 때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신규입법 수요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2007년도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소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계획이 발표되어 이를 실천하고 각종 새로운 제도를 기존 운영제도에 담을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정부의 규제철폐이 단순화와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들을 고려한다면 통합인증관리법 등과 같은 신규입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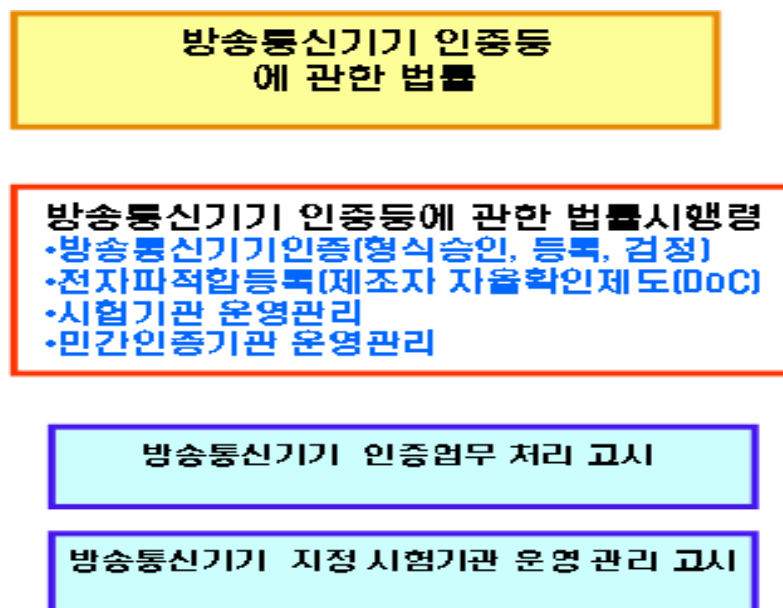


그림 3 - 4 통합인증관리법과 같은 신규입법모델

다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기통신기본법을 대체하는 형태로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기본법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담을 것인지 혹은 별도의 통합인증관리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기본법의 법적성격과 관련 규제의 범위를 고려할 때 인증에 관한 특별 법적 성격을 지니는 통합인증관리법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관련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양 제품 모두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별개의 법률을 두고 있다.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법률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은 총칙, 인증 및 자율확인제도 적용 대상제품, 인증제도와 제조자들의 자율확인제도의 운영 및 표시에 관한 규제사항, 인증기관에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제3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제2장),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인증제도와 제조자 자율확인제도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을 담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현행 전파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도 이와 유사한 체제로, 통합인증관리법 제정 시에도 유사 입법모델로 참고할 수 있겠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품질경영	제2장 전기용품안전관리 제1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제3조(안전인증)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제5조(안전검사)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등)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등)
제7조(품질경영체제를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등)	제7조(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 사용등의 금지)
제3장 공산품 안전관리	제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절 기본원칙 등	제9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8조(기본원칙)	제10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등)
제9조(공산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2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10조(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등)
제11조(공산품 안전심의위원회)	제12조(안전검사)
제2절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제13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등)	제14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 사용등의 금지)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제3절 그밖의 전기용품
제14조(안전인증 등)	<생략>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7조(판매·사용등의 금지)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신고 등)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1조(판매사용등의 금지)	제3장 한국전기제품 안전협회 <생략>
제4절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 품질 표시 등)	
제23조(거짓의 안전, 품질표시금지등)	
제5절 및 제6절 <생략>	
제4장 보칙	
제30조(공산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31조(개선, 수거, 파기명령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자료 제출요구)	
제34조(수수료)	
제35조(청문)	제4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18조(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
제37조(벌칙적용등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한 지원)
제5장 벌칙	제1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38조(벌칙)	등의 개선, 파기 수거명령등)
제39조(벌칙)	제20조(보고와 검사 등)
제40조(양벌규정)	제21조(수수료)
제41조(과태료)	제22조(청문)
부칙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4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부칙

표 3 - 2 공산품 및 전기용품 분야의 유사입법사례

제3절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1. 개 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 제1장 총칙은 법률의 제정목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하의 장에서는 기존의 전파법의 규정내용과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 내용을 적절히 조화시켜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 양법 규정의 규제수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규제의 강도가 낮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와 관련된 기본 개선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개선계획의 내용을 추가 법제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상이한 규제내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요 내용들은 규제의 강도가 낮은 것을 기준으로 통합하고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11월과 2008년 4월 마련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된 제정 원칙을 삼으면 될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인증유형의 재분류 체계 마련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계획」의 인증유형의 재분류는 현행 기기의 위해 정도·안정도·불량률에 따라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위해 정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한 기기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 - 5 인증유형의 재분류 원칙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증체계를 정부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제3자 적합성평가제도)와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후 등록하는 적합등록(제1자 적합성평가, 제조자적합선언제도)로 단순화 하는 것으로 재분류 하는 것이다, 물론 인증유형 재분류에 따른 대상기기 및 분류기준에 대하여는 하위입법사항으로 위임하게 된다.

나. 신제품 출시 촉진을 위한 가칭 ‘가인증제도’의 마련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칭 ‘가인증제

도'는 신제품은 개발하였으나 관련된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지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개발 후 적기에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공통기술기준만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새로운 통신방식·기술을 사용한 모든 방송통신기기에 해당하며, 최소한의 공통규격(국제표준, 단체표준 등)을 우선 적용한 후 인증기준 제정 시 본인증을 진행하는 예비허가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다. 시험기관 사후관리 강화 등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계획」에서는 인증제도의 유형재분류, 가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험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산업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쟁을 통한 인증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민간인증기관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민간인증기관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인명구조등과 관련된 사항이나 민간인증기관이 할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정부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및 결함정보 보고제도 마련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함정보 보고 제도는 인증받은 기기의 사후관리의 일부를 제조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게 하여 정부 중심의 강제사후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발적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

성하는 것과 소비자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정보 보고제도를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체계에 부합토록 도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결함정보 보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조·수입·유통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수거·환급·교환 등 조치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부적합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적합 기업 및 제품 정보는 인터넷에 공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적합 제품 정보를 공개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일부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 기타 :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 규정사항 통합 정비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통합인증관리법 제정을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규율대상이 되는 방송통신기기의 정의, 적합성평가 등 새로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외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각종인증 신청 및 변경절차, 인증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행정처분 기준 및 벌칙규정, 각종 준용규정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⁷⁾ 아울러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각종 고시에 산재된 인증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상향 입법하는 것도 필요하다.

7) 이에 대하여는 이 장 제1절 현행법령체계의 분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4절 통합인증관리법 제정(안)

법률 제 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통신기기 이용자의 이익과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망”이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방송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방송통신체제를 말한다.
3. “방송통신기기”라 함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4. “적합성 평가”란 방송통신기기가 국내외 표준, 규격, 기술기준등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적합인증”이란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기가 요건에 맞음

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적합확인”이란 방송통신기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가진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이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기가 요건에 맞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조”란 방송통신기기 또는 방송통신기기의 일부를 설계하여 조립, 가공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8. “판매”란 방송통신기기를 대가를 받고 거래(방송통신망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입”이란 방송통신기기를 해외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이란 방송통신기기를 진열(방송통신망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관, 운송하거나 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방송통신기기의 관리 등

제1절 기본계획 등

제3조(방송통신기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①방송통신위원회는 5년마다 방송통신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기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수입된 방송통신기기 및 새로운 종류의 방송통신기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기의 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기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전파연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기본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방송통신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기 제조자와 방송통신기기 안전 관리와 관련된 기관에 대하여 방송통신기기 안전에 관한 시험장비·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방송통신기기 안전자문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기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적합인증 대상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 및 적합확인대상 방송통신기기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적합인증, 잠정허용조치, 적합확인대상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기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안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그 밖에 방송통신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 등

제6조(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기준) 방송통신기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고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적합인증)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기기를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방송통신기기를 제조(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해당기기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법에 따른 잠정허용조치를 받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적합인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적합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적합확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이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기기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법에 따른 잠정허용조치를 받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기기는 이법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적합성평가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③적합확인을 한 자가 확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④적합등록(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적합인증·적합확인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종류와 수량을 정하는 기기는 적합인증이나 적합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에 준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적합인증·적합확인의 표시) 적합인증이나 적합확인을 한 자가 해당기기를 유통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기와 포장에 적합인증이나 적합확인을 하였음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11조(적합인증·적합확인의 취소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 후 제조·수입·판매된 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합인증을 받은 자나 적합확인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기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선·수거·파기·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을 받았거나 적합확인을 한 경우
2. 적합인증표시나 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인증의 변경신고나 적합확인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적합인증이나 적합확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기에 대하여 적합인증이나 적합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으로서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설비·인력과 품질관리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적합성평가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정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2. 지정평가업무를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때
3. 다른 지정평가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한 때

③지정평가기관은 지정평가업무를 전부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지정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지정평가기관 지정(변경과 해지를 포함한다)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평가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합성평가기관업무를 정확하지 않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이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지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지정평가기관이 다시 같은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방송통신기기의 보급촉진

제14조(잠정허용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이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수량,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기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허용조치’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 혼신을 초래하지 않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방송통신기기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등 기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②잠정허용조치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허용조치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적합인증을 받거나 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잠정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기기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기와 포장에 잠정허용조치를 받은 기기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④잠정허용조치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적합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허용조치의 효력이 소멸된다.

제15조(잠정허용조치의 취소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잠정허용조치에 따라 제조·수입·판매되는 기기가 잠정허용조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잠정허용조치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허용조치를 취소하거나 개선·수거·파기·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잠정허용조치를 받은 경우

2. 잠정허용조치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잠정허용조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잠정허용조치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는 해당 기기에 대하여 잠정허용조치·적합인증·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절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의 국제협력

제16조(적합성평가결과 국가간 상호인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국내의 적합성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이법에 따른 적합성평가결과로 인정하는 내용
 3. 상호인정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하는 내용
- ②상호인정협정의 체결절차와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법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확인을 위한 적합성평가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장 방송통신기기의 시장 감시 등

제18조(개조·변조·복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적합 인증·적합확인·잠정허용조치를 받은 기기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기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대여 또는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방송통신기기의 조사·시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인증·적합등록·가인증을 받은 기기가 적합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인증·적합등록·가인증 받은 자료부터 당해 기기를 제출받거나 구입하여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의 사무실,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무선국이나 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의 시정·철폐·파기·수거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기기의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한 출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시험의 방법, 절차, 면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적합성평가기관의 검사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해당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험기관의 사무실, 작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 7일 전까지 일시,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출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를 없애는 등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시험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면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적합 보고 등)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가인증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자는 해당 기기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방송통신기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기의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

자 및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기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관련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방송통신기기 안전정보망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합인증신청(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에 따른 잠정허용조치 신청을 하는 자
2. 제1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3. 제20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검사를 받는 자

제24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적합인증이나 적합확인의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5조에 따른 잠정허용조치의 취소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합인증·제8조에 따른 적합확인·제14조에 따른 잠정허용조치를 받지 않은 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인증·적합확인·잠정허용조치를 받은 기기를 개조·변조·복제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인증·적합확인·잠정허용조치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자
2. 제7조에 따른 적합인증·제8조에 따른 적합확인·제14조에 따른 잠정허용조치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대여 또는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유통한 자
3. 제19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11조의 제1항·제13조 제1항·제15조의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나 제26조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에서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적합인증·적합확인표시나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잠정허용조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한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확인 후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자
3. 제20조 제1항에 따른 검사·현장출입·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인증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이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는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이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한 기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의2·제35조·제36조·제45조의2 제1호 및 제2호·제48조·제49조의 제6호에서부터 제8호·제53조 제1항의 제6호에서부터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파법 제46조·제57조·제69조·제74조·제75조·제79조제1항·제84조 제2호 및 제3호·제86조 제1호의2·제2호·제5호·제90조 제3호의2·제92조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호중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기기”를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제8조에 따른 적합확인을 받은 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 4 장 통합인증관리법(안)의 제정에 따른 비용 · 효과분석

제 1 절 개요

현재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은 무선기기는 전파법(제46조 및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선기기는 정보통신기본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관련 규정을 가칭 ‘방송통신기기 통합인증관리법(안)’으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명료하게 규정하고자 한다.

현행 인증체계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인증을 받은 후, 방송통신기기 제작·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증업무는 전파연구소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업무는 전파연구소가 지정한 민간시험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지정시험기관 지정은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지정규칙” 및 국제 규격 ISO/IEC 17025에 따라 전파연구소에서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다. 현재 지정을 받은 국내시험기관은 37개이며, MRA에 의한 외국의 시험기관은 67개에 달하고 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대상 기기 및 사용 목적에 따라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인증유형은 기기 특성과 위해 정도에 따라 인증,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입증(Verification)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EU는 다양한 유형의 SDo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제조업체가 스스로 시험한 후 적합성을 선언하는 제도 도입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 적합성선언제도는 EU는 92년에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 95년, 캐나다가 2001년, 일본이 2004년도에 도입하였다.

각국의 규제동향은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인증기준 적용대상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전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감시활동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EU는 회원국 공동으로 부적합 제품 정보시스템(RAPEX: 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consumer products)을 구축·운영하여 불량 제품 사후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제재하고 있다. 일본의 전자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는 시험에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한 모델명, 불합격 사유 등을 소비자도 열람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인증업무를 민간에게 이양시켜 자국의 산업을 발전의 토대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쟁을 통해 인증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인증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외국제품도 자국에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규 법(안)에는 ‘인증기관의 민간화’, ‘자기적합성선언(SDoC)’ 및 ‘MRA 2단계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신규 정책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인증기관의 민간화는 정부가 직접 인증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적합성선언(SDoC)은 인증에 있어서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후관리에 주력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MRA 2단계 조치 역시 이미 인증이 민간화되어 있는 국가와 체결하기 때문에 국내 인증분야가 민간화되는 것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이 제정되는 3개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용-효과대상이 되는 정책이 아닐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정책이 규제 완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민단체나 기업의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각 각의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법안 제출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 2 절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

1. 민간화의 개념 정립

민간화란 사회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 더 의존하는, 즉 활동이나 자산소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민간화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를 그들의 원래장소인 민간부문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시장관련성을 창조하고 전통적인 공공프로그램보다 우수하거나 또는 필적하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화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영국의 경우, 민간화는 주로 민간인에게 국영기업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비국유화(denationalizatio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자유화(liberalization)와 규제완화(deregulation)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존슨과 하일만(Johnson and Heilman, 1987)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배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민간화로 규정하고 있고, 풀과 픽슬러(Poole and Fixler, 1987)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자산과 서비스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민간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팩(Pack, 1987)은 공공재원,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공공규제라는 세 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민간부문으로 이양되는 것을 민간화로 규정하

고 있다. 스타(Starr, 1989)는 보다 구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양을 민간화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화는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정치와 행정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된 개념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 보수적인 정부의 융성과 더불어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민간화의 시대(decade of privatization)로 불리 올만큼 민간화가 하나의 정책유행으로서 전세계에 파급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작고 능률적인 정부 모색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2. 방송통신기기 분야에서의 인증업무의 민간화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의 민간화는 현재 정부기관인 전파연구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민간기관에게 업무를 이양하여 인증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산품에는 오래 전부터 법정강제인증품목에 대해서도 민간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가 오래 전에 민간화되어 실시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업무처리 수준이나 신뢰성도 정부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의력이나 활력이 높아 민간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민간화가 통합인증관리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인증업무 민간화의 필요성

가. 정부독점에 따른 문제 정의 및 내용

(1) 문제의 정의 및 내용

현재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정부기관인 전파연구소가 독

점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처리의 지연: 방송통신기기 제조자나 수입유통업자가 국내 유일한 인증기관인 전파연구소에 업무를 모두 맡겨야 함으로서, 업무처리의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이 인증업무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의 활력으로 업무처리 기한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업무처리 기한이 25일에서부터 55일까지 이다.

(나) 인증기관에 대한 공급자 선택권의 제한: 인증기관이 전파연구소로 한정되어 방송통신기기 제조자 혹은 수입유통업자의 인증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자의 다양하고 고품질 인증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원천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MRA에 체결에 따른 문제점 발생: 외국 정부와 MRA 체결시 인증기관이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데 반하여, 상대방 국가는 민간조직이므로 인증기관의 위상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파트너가 민간조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간의 협상에 있어서 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가)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인증 독점기관인 전파연구소에 업무를 맡기게 되어 지연되는 일수는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개념적으로는 지연에 의한 피해는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을 조사하고, 인증업무가 민간화되고 나서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하고, 이들 간의 차이가 도출될 것이다. 이들

간의 차이를 기업의 비용측면에서 분석하면 피해액수가 도출될 것이다.

구분	시험분야	소요시간(최대)	기간의 연장(부득이한 경우)
유선기기	전기통신시험	25일	25일
	전기안전시험	25일	25일
	전기통신 및 전기안전 동시 신청자	25일	25일
무선기기	형식검정(경보자동수신기 및 레이더) 시험	55일	55일
	형식검정(기타 무선기기) 시험	25일	25일
정보기기	전자파 장애(EMI)	25일	25일
	전자파 보호(EMS) 시험	25일	25일
	EMI 및 EMS 동시 신청 시	25일	25일

표 4-1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한 인증 처리기간

상기에 적시된 소요기간은 전파연구소가 인증업무 처리를 위해 최대한 소요할 수 있는 기간이며 실제적으로는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업무가 처리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 인증기관의 복수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자가 인증업무처리에 소요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단축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증업무의 단축기간은 민간인증기관의 숫자와 민간인증기관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파연구소의 독점적 처리에 따른 피해를 금전적으로 규모를 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나) 인증기관에 대한 공급자 선택권의 제한에 따른 피해: 민간 기업은 지리적 위치 혹은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인증기관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전파연구소로 제한되어 있어 특정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즉, 인증신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들이 받는 피해가 산정하기가 곤란하지만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조업자가 받고 있는 피해규모는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가 민간인증기관과 정부인증기관간의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면, 전파연구소가 독점하여 나타나는 인증기간의 장기화만이 피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①번에서 언급된 피해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계상하면 중복계산이 된다. 따라서 선택권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피해는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 MRA 체결시 협상 파트너의 위상에 의한 피해: 현행과 같이 전파연구소가 인증업무를 독점하면 MRA 체결시 상대방 국가는 인증기관이 민간기구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인증업무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신뢰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이양되어 있으며, 민간기관이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이나 후진국가에서 행정조직을 인증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사회적 신뢰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을 민간화시키지 못하여 나타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국가 이미지의 손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의 손상 정도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을 계량적, 금전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3) 인증업무 민간화 지연발생의 원인

(가) 현재까지 전파연구소가 인증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민간기관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시

장의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적고, 시험기관도 숫자나 규모면에서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영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증기관으로의 진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험기관의 숫자가 적고, 시험기관 간에도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르다. 즉, 민간으로부터 인증업무이양에 대한 요구가 적은 것이 민간화 지연 사유 중의 하나이다.

(나) 전파연구소는 민간기관이 아직 인증업무를 담당하기에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화를 지연시켜 왔다. 즉, 민간기관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파연구소가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을 주저하여 왔다. 아울러, 인증업무를 이양하면, 부처의 업무가 사라지고, 조직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전파연구소의 위상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증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나. 민간화의 필요성

현재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는 전파연구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 여러 개의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제조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독점에 따른 업무처리지연, 제조자의 인증기관에 대한 선택권 제한, MRA 체결시 협상 기관간 지위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인증기관이 적절히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증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인증업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영리 추구만을 위한 졸속한 인증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시장실패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화에 따른 시장실패 요인 최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단계적 시장 개방 방안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시장을 전면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면 예기치 못하였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간기관이 자격 요인을 갖추는 때 까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한정하여 자격을 부여한 후 이들에게만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 일반 민간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판단되면 민간시장에 인증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강화하여 무자격 인증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정부기관의 사후 관리 감독 강화

방송통신기기 인증시장이 민간화되면 시장의 특성상 관련 기업이 난립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인증기관인 전파연구소의 주요 업무를 인증에서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U의 CE 마크 등, 선진국가도 방송통신기기의 부적합율이 70% 전후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이나 대만산의 부적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파연구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기의 부적합율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민간화의 목표 설정

(1) 민간화의 목표

민간화의 목표는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인증업무처리 자격을 부여하여 시장 원리에 의해 인증분야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업무 관리·감독기관은 인증업무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대안별 장·단점 비교 분석

인증업무 민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전면적 개방과 단계적 개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방 안	장 점	단 점	비 고
전면적 개방	<input type="checkbox"/> 조속한 민간화 시행 가능	<input type="checkbox"/> 시장실패의 가능성 존재	<input type="checkbox"/> 우선적 고려 방안
단계적 개방	<input type="checkbox"/> 시장실패 가능성의 최소화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 부여 가능	<input type="checkbox"/> 민간화의 지연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차선적 고려 방안

표 4-2 대안별 장·단점 비교 분석

4.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의 민간화 실현 가능성

가. 일반 국민 및 사회단체의 대응 상황 사전 분석

일반 국민들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에 대하여 생소하여 특별히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일부 국민도 특별히 민간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이 그들의 의견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공공에게 전달하더라도 국민이 이에 대한 호응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도 민간화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여야 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동

의하기 때문이다.

사회단체에서도 민간화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으므로 반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업무의 담당관청은 주된 업무를 인증업무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제조자 및 잠재적 민간인증기관의 대응 상황 사전 분석

제조자는 인증기관의 확보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민간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단지, 민간화에 따른 인증비용의 상승에 대하여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증기관이 정부기관보다 효율적이고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최적의 비용으로 제조자는 원하는 기간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잠재적 민간인증기관은 다른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증기관과 방송통신기기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시험기관이라고 판단된다. 여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증기관은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인증시장 개방을 절대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민간 시험기관의 주장은 양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업무의 민간화는 인증시장을 재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 일정한 시설, 인원, 재원을 갖춘 시험기관만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영세한 시험기관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워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세 시험기관은 향후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제조자는 일괄적으로 시험업무와 인증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집중될 것이므로 영세시험기관은 고객의 감소로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업무를 수

행하기가 어려운 시험기관은 민간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할 것이고,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가능한 시험기관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다. 국내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본 민간화의 실현 가능성

국내 기관이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다른 분야의 인증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도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인증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기기 인증기관의 민간화를 추진하는데 국내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의 기술수준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민간화의 비용·효과 비교 분석

가. 제조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민간화에 따라 제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인증비용의 상승에 따른 추가 인증비용이다. 현재에는 전파연구소가 인증에 따른 소요 경비만을 비용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이익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금전적으로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정부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인증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여 부적합 제품이 적을 수 있다. 반면에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여야 함으로 신청

자에게 엄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어서 인증의 엄격성이 다소 떨어 질 것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도 비교적 덜 엄격할 것이다. 따라서 부적합 제품이 양산될 수 있어 소비자가 부적합제품을 사용할 사용성도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민간기관의 인증비용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증비용이 상승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제품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은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의 사용에 따른 손실과 민간인증기관의 높은 인증비용이 제품이 전가되어 나타나는 가격 상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금전적으로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

인증기관이 민간화되면, 예상되는 부적합률의 증가로 인해 인증기관과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화에 따라 정부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의 증가이다. 그러나 증가된 사후관리비용을 금전적으로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 액수도 매우 미미할 것이다.

6. 민간화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분석

가. 제조자에게 발생하는 효과

인증기관이 민간화되면 제조자는 증가된 인증기관으로 말미암아 인증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기관의 활력으로 기업은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운영에 있어 융통성과 인증기간의 단축이 민간화에 따른 기업의 효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효과

제조자가 인증이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소비자는 조기에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신제품의 조기 사용은 사용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의 민영화로 인한 소비자의 효과는 신제품 조기사용과 이에 따른 경쟁력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을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 정부에게 발생하는 효과

정부는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관하게 되므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에도 인증비용을 받고 있으나, 이는 단지 실비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정부의 편익은 인증비용과 인증수입 간의 차이이다.

7. 비용·효과의 비교 및 검토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비용과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 상	비 용	효 과	비 고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로 인한 제품 부적합률 제고에 따른 피해증가 · 인증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신속구매로 인한 제품선택권의 확대 · 신제품 조기 사용으로 경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비용과 효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함 · 금전적 측면에서 비용과 효과가 모두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비용의 상승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에 대한 선택권 확대 · 인증기간 단축에 따른 업무 운영의 신속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사료되나 금전적 효과는 미약할 것임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감독의 강화 요구에 따른 비용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함에 따른 비용 절감 (현재 실비만 수수료로 징수하므로 행정비용 감소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와 사후관리업무간 인원이동으로 인하여 비용과 효과가 상쇄 전망

표 4-3 인증기관의 민간화에 따른 비용과 효과

인증기관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국내 기관이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 시장실패요인이 상존하므로 단계적 개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금전적 효과는 MRA 체결 시 상대국의 인증기관이 민간조직이어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인증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비용-효과는 모두 미약하여 금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 직관에 의한 추정에 따르면 미약하나마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방송통신기기 인증분야에 공급자 적합성 선언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1.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제도의 개념 정립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는 전통적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공인이나 제 3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사, 검사, 인증을 대체하는 규제 대안으로서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제품이나 그 공정, 그리고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절차(ISO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조자가 스스로 자기 제품이 해당기준(일반적으로 IEC, ISO등 국제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급자의 의미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배급자, 수입업자, 중개업자, 서비스단체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핵심은 제품에 대한 사전검사 없이 공급자가 SDoC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시장진입이 허용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목적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관련 서비스가 선언서에 언급된 규격을 충족하였는지를 보증하고 적합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공급자나 제조업자가 선언서에 언급된 규격에 포함된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

선언서에서는 선언 주체(공급자),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기술규정 또는 표준, 선언서에 서명하는 사람 등의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선언서는 별도의 문서 형태를 취해야 하며, 각 선언서는 참고 사항을 넣어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언서에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선언서를 발행하는 공급자의 상호 및 주소

나.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식별(예를 들면, 이름, 형식 또는 모델 번호 및/또는 부가 정보); 또한, 선언서에는 파생 모델,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공급의 경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적합성 선언문

라. 정확하고, 완전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작성된 문서

마. 선언서를 발행한 일자 및 장소

바. 공급자를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의 서명, 성명 및 역할

선언서에는 적합성 평가 결과와 관련이 있는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의 상호 및 주소, 시험성적서 참고 사항, 관련 경영 시스템 참고 사항, 인정 시험소 참고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SDoC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EU의 CE마킹 제도를 들 수 있다. SDoC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요구수준이 법령 등에 성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급자는 SDoC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제품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는데 선언서의 내용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SDoC는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한 시험여부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의 SDoC 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 (<표 4-4> 참고)

가. 제 3자의 공인된 검사결과를 기초하여 자기적합성 선언을 하는 경우와 이러한 의무적 검사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규제기관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과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3자의 공인된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규제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요구하

는 것은 고위험 제품 제조업체의 규제사항 비준수 등 일탈행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의 경우, SDoC를 적용할 때 비공인 기관의 검사나 혹은 공공기관에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이 준비되어 있다.

위험의 수준만으로 제품에 적합한 SDoC 유형이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동차가 고위험의 제조품인데도 어떠한 의무적 검사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고위험 생산품에 대한 자가 검사 제도를 통해 자기적합성선언을 하고 광범위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한 시험 여부	
		o	x
등록 여부	o	Type 1	Type 3
	x	Type 2	Type 4

표 4-4 SDoC의 유형

SDoC의 제 1유형은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해 시험을 거치며, 동시에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규제기관에 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한 시험을 거친다는 점에서 순수한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행 인증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적합성 선언의 주체가 공급자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강제 인증제도와는 구별된다.

제 2유형은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만, 규제기관에 의한 제품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이다. 제 3유형은 공인된 기관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규제기관에 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상의 위험이 적은 대상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

한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공급자 스스로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순수한 의미의 SDoC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 4 유형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자율성이 가장 크게 보장되는 경우로서 시험 기관에 의한 시험도 규제기관 등록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 4유형은 제품의 특성상 안전상의 위험도 상당히 적고, 시장 감시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실제 SDoC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제 4유형은 안전상에 문제가 거의 없는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의 필요성

생명, 신체, 환경, 에너지 등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제품에 대하여 정부의 인증 없이는 시장에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정 강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과거 보다 여러 면에서 성숙하였고, 기업도 과거보다는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안전 등에 문제가 적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인증제도보다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SDoC 제도의 도입이 지체되면 제조자의 비용이 증대되고 이러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제조자는 물론 소비자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가 도입된 제품의 부적합율도 현재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정부기관은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가 도입

된 이후에는 기관의 역할을 사후 부적합율의 낮추기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기기 중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시 인증방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1단계	2단계	3단계
형식 승인	인증	SDoC	SDoC
형식 등록	인증	인증	인증
형식 검정	인증	인증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SDoC	SDoC	SDoC

표 4-5 단계별 인증방식 개선방안

3.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적합성 선언제도는 규제의 관점에서 조망하면 근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과 사회단체들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소비자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들의 의견은 소수 사회단체의 의견으로 치부될 것으로 보인다.

나. 정부기관의 관점에서 본 실현 가능성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파연구소가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입 이후에 전파연구소의 역할을 적절히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환경에 비추어 적합성선언제도의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분석

(1) 제조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검토

SDoC도입에 따라 제조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조자는 지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친 후, 시험 결과에 의거하여 적합성 선언을 하고 시장에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2)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검토

소비자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제품의 부적합을 상승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자가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를 정부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면 부적합한 제품이 양산·판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적합한 방송통신기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의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우나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검토

방송통신기기 관리·감독 기관은 적합성 선언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사후관리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원 및 예산이 정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추산된다.

나. 제조자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1) 제조자에게 발생하는 효과분석

적합성 선언제도(SDoC)의 도입으로 제조자가 얻게 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이를 정리하면 인증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시장 접근방법과 시간에 대한 통제 가능, 제품 설계변경의 용이성 증대 및 신속한 제품의 시장 출하 가능하다.

(가) 비용절감효과

SDoC제도를 도입하면, 제조자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인증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나) 시장 접근방법과 시간에 대한 통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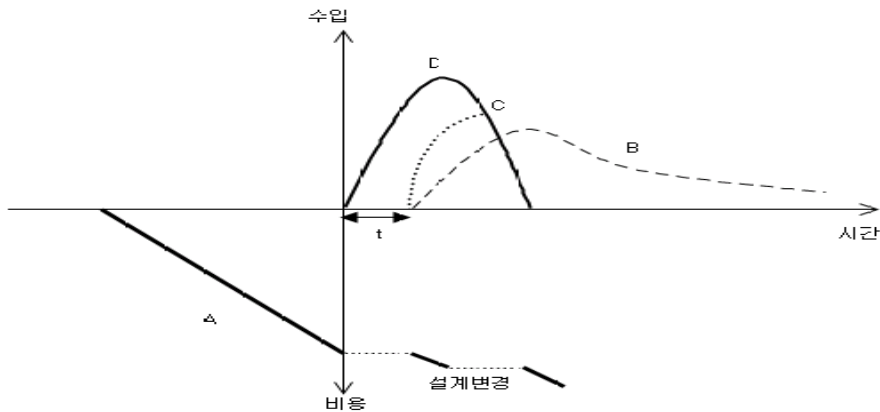
SDoC제도를 도입하면 제조자가 제품을 시장에 출하할 시간과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통제할 수 있다. 제품의 수명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제조자 적합성 선언제도가 제조자에게 주는 가장 큰 편익은 시장 접근 시간의 단축일 것이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기기의 생명주기는 3-6개월 정도이나 모델별 인증취득에 최소 20일이 소요되며, 기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약 200만원이 소요된다. 즉 방송통신기기의 생명주기에 비취어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인증기간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은 제조자의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품 설계변경의 용이성 증대

현재는 제조자가 파생상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 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설계 변경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SDoC가 도입되면 이러한 의무 사항이 없어지고, 단지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신규 제품이나 파생 제품을 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신속한 제품의 시장 출하 가능

SDoC가 도입되면, 공급자는 규제기관에게 발행하는 라벨과 인증서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마크를 즉시 붙이고 시장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A: 제품 개발에 소요된 누적 비용

t: 형식 승인 소요 기간. 가장 이상적이 방안은 소요시간이 zero(0)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소요 시간은 활용 가능한 시험소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B: 전통적인 제조자 수입곡선. 형식승인 취득 후 판매는 시작되며 제품 출하 직후 급격한 판매량의 신장이 나타난다.

C: 현행 제도 하에서의 형식 취득 이후의 현재와 미래의 제조자 수입곡선.

D: 단축된 제품 수명 주기와 제품 형식 승인에 있어서 시간 지체가 제거된 상황에서의 가능한 제조자의 수입곡선

그림 4-1 신속하고 적절한 시장진입 시간 (개념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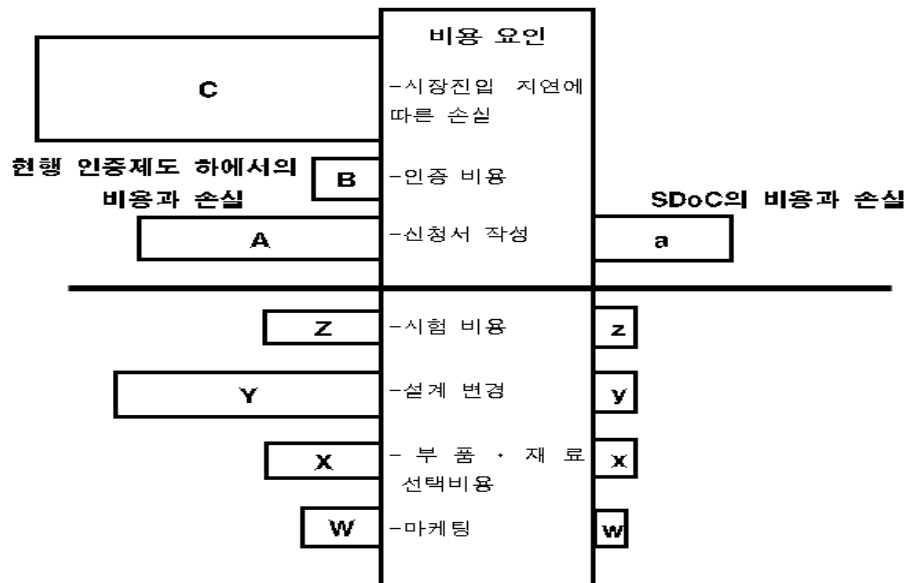


그림 4-2 SDoC의 효과

(2)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효과분석

(가) 신제품에 대한 선택권 조기 확보

소비자는 신제품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현행 인증제도하에서는 신제품의 출하가 지연되어 소비자의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SDoC가 도입되면 출하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호기심이 빠르게 충족될 수 있다.

(나) 신제품 사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신제품은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고 있어 비용대비 효과가 과거 제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우수하다. SDoC가 도입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3) 정부에게 발생하는 효과분석

SDoC가 도입되면, 정부가 직접 인증하지 않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지만,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 역시 예산의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비용-효과 비교 및 검토

SDoC의 도입에 따라 제조자나 정부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단지, 소비자가 부적합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부적합제품 사용에 따른 문제가 소비자의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금전적으로 계산 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SDoC가 도입되는 제품 제조자, 소비자 및 정부에게는 상당한 편익이 있다. 그러나 이를 계량적으로 명확하게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제조자가 SDoC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DoC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 상	비 용	효 과	비 고
소비자	· 규제의 완화로 인한 제품 부적합률 제고에 따른 피해증가	· 신제품에 대한 선택권 조기 확보 · 신제품 조기 사용으로 경쟁력 강화	·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가 곤란할 수준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제조자	· 전무할 것으로 예상	· 인증비용 절감 · 시장 접근 방법과 시간에 대한 통제 가능 · 제품 설계 변경 용이성의 증대 · 신속한 제품의 시장 출하 가능	· 측정 가능한 수준의 편익 발생
정 부	· 사후관리 강화 요구에 따른 비용	· 인증 비용 절감	· 비용-효과 모두 측정가능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미약

표 4-6 SDoC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현재 우리나라와 FTA에 체결하고자 하는 EU는 SDoC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게도 SDoC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 SDoC 도입은 가시적으로 무역량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DoC제도는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절 MRA 2단계 시행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1. MRA 2단계의 개념과 필요성

MRA는 규제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하는 협정이다.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출국의 규제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떤 국가가 특정제품에 대하여 제3자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인증협정은 인정받은 수출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시험성적서, 인증 및 승인을 수입국은 인정하고 그 제품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수출되어서 상대국의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MRA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이며, 제 2단계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과 인증서의 상호인증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MRA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범위는 2단계 도입에 한정한다.

관세와 더불어 기술장벽이 자유로운 상품의 교역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관세 문제는 FTA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기술장벽은 WTO/TBT 협정과 MRA를 통하여 제거되고 있다. UR라운드를 통한 WTO/TBT협정은 최종제품은 물론 공정 및 생산방법 자체를 표준화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상대국의 인증 및 시험·검사시스템과 같은 적합성 평가절차들을 회원국 서로가 인정하는 상호주의를 강조하였고,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동 표준의 채택이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경우만을 제외하

고는 수용토록 조항을 강화하였다.

TBT협정은 각국의 상이한 제도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는 있지만 각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규격의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TBT협정은 오히려 위생·보건·안전·환경보호와 같은 강제규범분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특정국에 의한 예외분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중앙정부간의 약속이 바탕이 되고 있어 지방정부나 비정부기관이 관련제도를 주관하는 경우 협정이행의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이 상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기술관련 제도가 동일하다면 기술장벽이 교역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어지게 되지만,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등 기술관련 규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상이한 한 범세계적인 공통의 기술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이한 기술 규정을 유지하면서 간편 제도가 기술장벽으로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각국간 기술 규정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다.

현재 MRA는 각국이 고유의 적합성 평가제도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 간에는 이미 MRA가 시행 중이며 APEC을 중심으로 개도국도 MRA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베트남, 캐나다, 미국 등과 1단계 MR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 2단계 MRA를 체결하고자 한다. 즉, 미국과의 MRA 2단계가 체결되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인증서 상호인정도 이루어지게 된다.

2. 사회적 규제요소와 기술수준에 비추어 본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국민이나 사회단체 및 기업은 MRA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에 순응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MRA 1단계 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반대나 혹은 찬성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MRA 2단계 실시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반대의사의 표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MRA 2단계는 제품 교역의 자유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에게는 수출증대효과가 있어 기업 또한 특별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발부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갖춘 기관이 상당하여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이나 다른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부하고 있는 국내 인증기관이 미국 FCC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MRA 2단계 조약체결과 동시에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규제의 비용과 효과의 비교분석

가. MRA 2단계 실시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의 단계적 추정

(1) 제조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MRA 2단계 실시는 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관세 외에 무역의 장애가 되었던 기술장벽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우리 시장이 협약국의 기업에게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다. 즉, 협상 대상국의 기업은 제품을 신제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출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자국 시장에 출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신제품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과거보다 단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외국제품에 대한 대응기간 단축에 따

른 기업의 손실이 제조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명시적인 비용은 거의 없다. MRA 2단계는 소비자가 외국산 신제품을 신속하게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인증서 상호인증에 따라 소비자가 감내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3)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

현재 전파연구소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MRA 2단계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 국내에 제품을 가져와 시험과 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에 인증과 관련된 인력이 일시적으로 잉여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MRA 2단계 체결 후 실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준비기간 동안 적절히 대처하면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된다.

나. MRA 2단계 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분석

(1) 제조자에게 발생하는 효과분석

MRA 2단계는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을 하는 협정이다. 상호인정협정을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출국의 규제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떤 국가가 특정제품에 대하여 제3자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인증협정은 인정받은 수출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인증서를 수입국은 인정하고 그 제품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수출되어서 상대국의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MRA 2단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비용의 감소와 상대국 시장의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

MRA 2단계가 체결되면 인증의 장소가 타국이 아닌 자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즉, 항공료, 체재비 또는 인증수수료와 같은 부대 경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의 표준이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이 영세한 중소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지사 등을 설립하기 어려워 수입국의 규제체제의 이해나 활용에서 크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체시험기관이 없을 경우 적합성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불합격율이 높기 때문에 MRA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나)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소

MRA 2단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이다. 실제로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이 소요 비용의 감소보다 더 큰 편익을 기업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즉, 상당수의 기업이 인증 비용보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말미암아 발주업체가 요구하는 날짜에 제품을 납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증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면 수출기업은 그 기간만큼 고정자본과 노동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손실을 보게 되고 MRA 2단계가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게 MRA 2단계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커다란 수출 촉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못하므로 수입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어 제품의 해외 수출이 대기업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MRA 2단계가 체결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소멸될 것이다.

MRA 2단계의 경제효과분석을 하기 위하여 먼저 양국간 대상분야의 인증비용을 비교하여 MRA 2단계로 인한 비용절감액을 추정하고, 수출입합수의 추정을 통해 수출입의 가격 탄력도를 측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용절감에 의한 가격하락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MRA 1단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증대효과의 경우 유선통신기기는 최하 21,000달러에서 최고 195,000달러의 대미 수입액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정보통신기기 전체적으로 최소한 2,465,000달러에서 최대 9,669,000달러의 수출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액수는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량에 비추어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MRA 2단계 실시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 시험 및 인증기관의 능력 향상

MRA는 기술, 표준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고 국내 시험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인증기관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조자는 고품질의 인증을 저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효과

MRA 2단계 도입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얻는 편익은 외국산 제품의 조기 구매 가능과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인증서 발급을 우리나라에 와서 받지 않고 현지에서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소비자가 외국산 제품의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은 매우 미약하여 실제로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3) 정부에게 발생하는 효과

기업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에서 인증서를 발부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국내 기업이 전과연 구소에서 받아서 얻어지는 추가적 수입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정부에게 발생하는 편익이다. 그러나 정부가 얻어지는 편익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MRA 2단계 도입은 민간화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인증업무로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당수의 기업이 국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유명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지속적으로 발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유통업자들이 국내의 제조업자에게 유명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4. 비용·효과의 비교 및 검토

MRA 2단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 상	비 용	효 과	비 고
소비자	· 거의 전무	· 외국산 제품의 조기구매 가능과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	·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가 곤란할 수준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제조사	· 외국 제품에 대한 대응 기간의 단축에 따른 손실	· 인증 비용 절감 효과 · 인증 기간 단축 효과 · 인증기관간 경쟁 심화에 따른 편익	· 중소기업에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MRA1단계 효과가 미약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측정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정 부	· 외국기업의 인증요청 건수 감소로 인한 세출 감소	· 국내 기업의 인증요청 건수 증대	· 비용-효과 모두 측정가능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미약

표 4-7 MRA 2단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

MRA 2단계는 추진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MRA 1단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MRA 2단계에 따른 비용이나 편익이 숫자적으로 크지 않으나, 비용보다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MRA 2단계 도입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편익이 숫자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산업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국제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 하에서 MRA를 통한 기술장벽의 완화가 갖는 비금전적 편익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MRA는 원칙적으로 기술기준 및 표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 강제분야, 즉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이 일반적이다. 기술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분야가 국가마다 상이하다. 기술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분야가 적은 국가일수록 MRA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될 것이다.

5. 여타 제도와의 비용과 효과 중복 계산 여부에 대한 논의

새로운 통합인증법률에는 인증기관의 민간화, 자기적합성선언(SDoC) 및 MRA 2단계 도입이 명문화될 것이다. 민간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불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은 주체별로 각기 다르다. 그러나 소비자, 제조자 및 정부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크지 않다. 반면에 민간화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신제품 조기사용과 관련된 편익이며, 제조자측면에서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자율권이 확대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경우에는 편익이 거의 전무하다.

MRA 2단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과 편익은 주체별로 각기 다르다. 비용의 측면에서는 어느 주체도 가시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없다. 편익의 측면에서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인증기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명확하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이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효과 분석 시에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한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중복적 계산이다. 예를 들면, SDoC의 주요 편익 중의 하나는 제조자의 인증에 대한 접근방법과 시간에 대한 통제 가능성 증대이다. 아울러 민간화 역시 이와 유사한 편익을 제조자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두 제도가 동시에 동일 법률에 포함될 경우에 이러한 편익을 두 번 계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효과가 유사한 세 가지의 제도를 같은 법률에 포함시킬 때, 중복적 계산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표준 확산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비정부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와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UN, WTO, ILO, WHO 등 국제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모든 국가는 국제표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장벽보다도 향후 표준장벽이 표준 후진국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법률에 의한 규제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관련 부처별로 운영되는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운용되는 적합성평가 활동은 주로 인증기관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Accreditation) 또는 허가(Recognition)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일정 수준을 보증하는 인증(Certification) 등이 있고, 그 외에 교정(Calibration), 검정(Verification), 시험(Test) 및 검사(Inspection) 등이 있다.

국내 인증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면 정부 14개 부처는 57개의 법령에 근거하여 80여개의 법정인증제도(강제 및 임의포함), 60개의 민간인증제도 등 총 150여개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인증제도는 다양하고, 자율적이며, 국제적으로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민간화 이행 수준의 미흡’,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의 부재’, ‘시장감시활동의 미흡’,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및 ‘사전규제제도의 유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들 문제점들이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민간화 이행 수준의 미흡’과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등은 우리나라의 규제제도가 사전적-행정적 규제의 틀을 유지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증업무의 민간화와 전파연구소의 기능혁신’, ‘규제방식의 혁신’ 및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증업무의 민간화와 전파연구소의 기능혁신’이란 현재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기관을 전파연구소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하고, 전파연구소는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시장감시업무에 역량을 치중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대다수 국가는 인증을 민간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증기관을 대형화, 다국적화하고, 이들을 통하여 자국 기업이 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규제방식의 혁신’이란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사전적-행정적 규제방식에서 사후적-사법적 규제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변혁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자체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빠르게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 맞추어 기업이 책임을 지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제도와 신기술 인증 절차 모듈을 도입하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란 인증제도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인 소비자보호가 인증기관이 민간화되고, 잠정인증제도와 SDoC제도를 도입되는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즉, 인증제도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있으므로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증기준의 강화, 부적합정보 보고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상호 중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민간화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의 민간화와 전파연구소의 기능혁신’과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민간화이행수준은 단순히 민간화만 추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채택되어야 한다.

‘신기술인증절차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인증제도는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혁신이 소비자 보호에 역행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혁신’과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EU 등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기적합성확인모듈’은 근본적으로 사후적-사법적 규제방식을 토대로 탄생한 제도이므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적-행정적 규제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시장감시활동의 미흡’의 문제는 인증업무의 민간화가 되면 인증업무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왔던 전파연구소의 기능을 시장 감시활동으로 전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문제도 종전의 모든 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혁신하자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문제도 ‘인증업무의 민간화’, ‘규제방식의 혁신’은 물론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해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인증 관리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통신기기의 인증과 관련된 입법 사항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하나의 법률체제화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독임제 행정부처가 아닌 까닭에 독자적인 부령 제정권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 결과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제 규율체계는 다소의 혼선을 겪고 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 운영체계의 문제와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불일치적 규제에 따른 문제에 따른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8년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의 이원적 운영을 보완하여 주던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과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령 제정권 상실로 폐지되면서, 부령 규정사항이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일부는 전파연구소 고시로 분리되고,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험인증제도 운영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불일치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부령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상이한 규제체제를 보완하여 주던 입법적 보충수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이 다음의 표와 같이 상이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소지들을 예전에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서 입법적 보충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러한 보충적 입법조치 수단이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3장 통합인증관리법률(안) 제정 부분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입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통합인증관리법률 형태의 새로운 입법모델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계획」 등과 같은 개선계획에서 담은 주요 개선사항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해당 개선계획에 따르면 주요 인증제도 개선 과제로 첫째, 인증유형의 재분류 체계 마

런 둘째, 신제품 출시 촉진을 위한 가칭 ‘가인증제도’의 마련 셋째, 시험기관 사후관리 강화 넷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및 결함정보 보고제도 마련을 들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인증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통합인증법률에는 인증기관의 민간화, 자기적합성선언(SDoC) 및 MRA 2단계 도입이 명문화될 것이다. 이들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효과 모든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편익 분석 시에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한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중복적 계산이다. 앞에서 언급된 3개의 제도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중복계산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국내자료>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1998),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연구”.

구제길 외(2006), “정보통신 해외인증제도 조사, 분석 연구”, 전파연구소.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실무작업반(2006.10), “일본의 인증·인정·등록제도”.

규제개혁 혁신포럼(2005),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매뉴얼”.

김영태·고선식,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동향, “TTA저널”, 81호.

산업자원부(2006.1),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

_____ (1999),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및 전망-한·EU 상호인정협정을 중심으로”.

_____ 기술표준원(2007), “법정 강제인증분야 기본모듈 및 모듈심사체계 구축 방안”.

송준기(1996),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MRA의 효과 및 분석방법에 대한 고찰”.

일본 경제산업성(2006), “일본의 인증·인정·등록제도 조사보고서”.

임호기(1999), “정보통신기기 해외인증 취득상의 애로조사”.

장학민(2006), “공산품인증마크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전파방송기획단(2007),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

전파연구소(RRL)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인증제도혁신 참고자료집”.

_____ (1999), “한일 적합성 평가제도의 비교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2003),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한국규제학회(2007),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도입방안 및 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7), “국내인증제도 혁신방안”.

_____ (2006), “미국 인증제도”.

_____ (2007), “유럽 인증제도 개요 및 적합성평가 모듈”.

_____ (2007), “유럽연합(EU)의 CE-마크 인증제도”.

_____ (2006), “일본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한국전파진흥원(2007),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_____ (2008), “정보통신분야에 적합한 모듈심사체계 연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5), “주요국의 정보통신 시험인증제도 및 체계”.

_____ (2007.7), “새롭고도 포괄적인(New & Global) 접근법에

따른 유럽연합의 IT 표준 · 인증제도 동향”.

혁신실무작업반 표준인증혁신팀(2007), “국가표준 · 인증제도혁신 시행계획”.

<외국 자료>

ANSI(2006),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f the United States".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BSMI)(2006 Edition), "Taiwan Commodity Inspection Schemes(Conformity Assessment).

Goerge Tannahill(October, 2005), "Introduction to FCC Rules and Equipment Authorization Program", FCC Office of Engineering Technology, Laboratory Division TCB Workshop.

Kiemel(2004. 6), "EMC Authorization of Wireless Devices in the US and EU", ICCC EMC Society: Minneapolis Chapter Meeting.

NIST(2005. 10), Workshop 자료.

_____(1997), "The U.S. Certification System from Government Perspective", NISTIR 6077.

_____(2001), "Directory of U.S. Private Sector Product Certification Program".

OECD(ICCP 27), "Telecommunications Type Approval : Policies and Procedures for Market Access".

<웹사이트>

<http://ec.europa.eu>

<http://www.anec.org>.

<http://www.ccc-mark.com>

<http://www.etl.re.kr>